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55



2021. 06

피우다



다이내믹, 의정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보

2021 June vol.655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1년 6월 1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의사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이승재 위원(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위원(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상현 위원(법제실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박기현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제방훈(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2266-189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꽃을 피우려면 벌을 쫓아내고 물을 주면서 애정어린 손길로 돌보아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예방 받아
김상희 국회부의장, 스페인·포르투갈 공식 방문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 포스터 종이부터 아껴요!

**특집 _ 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듣는
정국 운영 포부**

- 18**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_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 “대한민국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삶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
_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22**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국민의 삶에 안전과 희망 드리는 위원회 될 것”
_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여야 함께 국가 발전과 민생안정 위한 주춧돌 쌓을 것”
_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26** **길에서 길을 찾다** _ 서영석 의원
경기 서남권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부천
- 30** **칭찬합시다** _ 추경호 의원
‘정치란 국민이 필요한 것을 면밀히 살피는 것
- 32** **의원의 좌우명** _ 이정문 의원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지침이 되어준 가르침
- 34**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 이용 의원
‘썰매 명장’에서 국회의원으로
- 36** **기고**
인공지능과 국회도서관 _ 현진권
산자증기위,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열어
각계 의견 청취 _ 송수환
- 40**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2050 탄소중립,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48**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가사노동자법’ 등 민생법안 98건 의결

61 **위원회는 지금**

국회, 국무총리·장관·검찰총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실시

68 **법률 시대를 읽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직선제로 변경 _ 권영진

70 **국회 주재관 리포트**

인도네시아 의회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_ 윤성민

72 **법 시행 그 후**

‘첨단제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 **만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76 **국회 뉴스**

82 **국회 사람들**

“미래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내실 있게 분석”

84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무역을 장악한 소그드인
_ 이광태

88 **수목원 탐방**

강릉솔향수목원

92 **바이러스의 역사**

19세기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콜레라’ _ 도현신

94 **국회 미술관**

시간과 공간과 일상을 포착하는 유근택의 눈과 손 _ 김준기

97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자란’

98 **오천 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쓰러진 근대의 꿈, 망국의 한...남양주 흥릉과 유릉 _ 이광표

102 **대한민국 문학기행**

항일의 길, 사랑의 시 _ 장태동

106 **생활 속 우리말글**

‘명사 샌드위치’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_ 김형주

107 **정치 관련 주요 일지**

박병석 국회의장,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5월 24일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의사당에서 바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 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순방은 러시아 바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 의장은 5월 22~26일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의 의미를 되새기고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데 주력했다. 특히 상·하원의장을 만나 △남북 대화 재개에 러시아의 중재 협의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5월 22일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코는 5월 27~29일 방문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 진출 확대를 도모했다. 밀로시 제만 대통령 등 체코 국가서열 1~4위를 모두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체코 공동 협력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참여 △체코 사이버 보안분야 협력 △체코 내 리튬 개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 △서울·프라하 직항노선 재개 등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윈윈(Win-Win)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22일 모스크바 구세주성당 레드홀에서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의 면담으로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러시아 정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위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에 키릴 총대주교는 “남한과 북한은 언젠가는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남한과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한·러 경험 확대, 스푸트니크V 한국 생산 등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24일 모스크바의 하원의사당에서 바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구축 협력, 수소경제와 북극개발, 교역 확대 등 한·러 양국의 경험증진, 코로나극복 연대 방안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에게 “남북국회회담,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동북아 방역 공동체 등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국회의장 회의는 지지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백신을 개발해 각국에 보급하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세계적인 백신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 볼로딘 하원의장은 단독회담에 이어 바로 양국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회담을 가졌다. 확대회담에서 박 의장은 한·러간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조속히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연해주의 한국 전용 산업단지가 연내에 기공되길 바란다. 한국 기업의 연해주 진출은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과의 회동 전 모스크바 소재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국회 방문단이 5월 25일 모스크바 상원의사당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 강조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25일 모스크바 상원의사당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3년 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의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원의장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양국 의회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장님의 평가에 공감한다”고 화답하며,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무조건 한

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코로나 백신 협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한국에서도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승인 작업을 시작했고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스푸트니크V 백신이 한국에서 조속히 승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 체코에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 강조

체코로 이동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27일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체코는 제조업이 강하고 양질의 노동력



박병석 국회의장이 5월 27일 체코 프라하 상원의사당인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합치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원전건설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기술능력, 시공,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의장은 사이버보안과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긴밀한 양국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의 4대 그룹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체코도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서로 좋은 조건으로 협력이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27일 프라하 대통령 관저에서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체코 공동 협력,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참여 등 경제협력 강화, 서울·프라하 직항노선

재개 방안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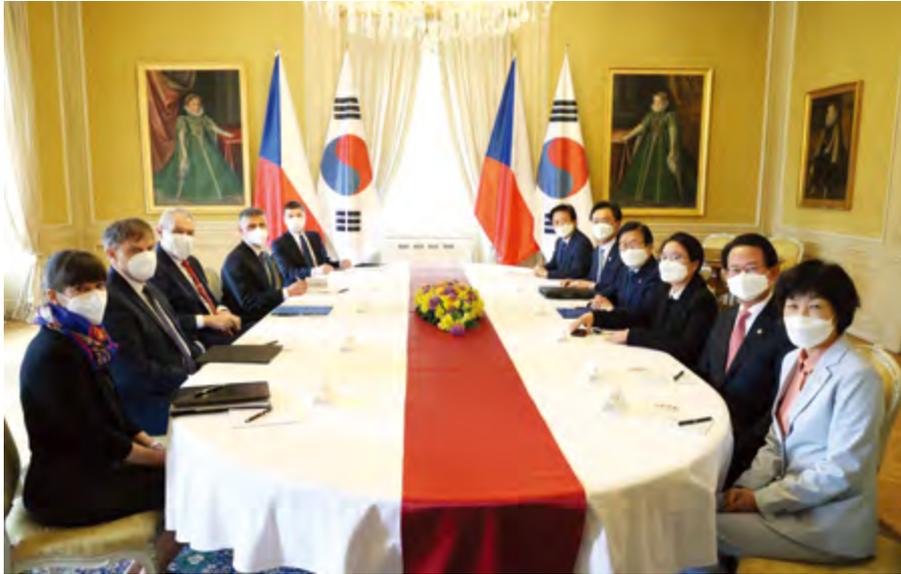
박 의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을 존중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해 “저는 작년에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 대표단을 만날 자세가 돼 있다”면서 “제만 대통령도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신규 건설 예정인 두코바니 원전은 우리나라가 가장 최적의 파트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40여 년에 걸쳐 24기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도 국내 4기, 해외 4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만 대통령이 강조했던 현지 업계의 참여, 기술이전도 우리는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28일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만나 경제협력 및 관광활성화,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원전은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다. UAE 바라카 원전은 국제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업운전을 이미 개시했다”며 UAE 사례를 소개했다. 또 “공기 준수, 공사비, 운영 능력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능력을 강조하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박 의장은 “원전에서 사이버보안은 절대적 요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5월 27일 프라하 대통령 관저에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소”라며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능력에 국력을 집중했다. 원전에 그런 사이버보안 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는 말로 우리 원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바비시 총리는 “UAE 원전 사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카렐 하블리체к 산업통상교통 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 파트너다. 한국이 원전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 수일 안에 사전 안전성 평가 결과를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며, 14개월 안에 입찰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총리 면담을 마친 박 의장은 밀로시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 함께 현지 및 한국 언론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체코 방문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 상·하원의장과 총리를 모두 만나 양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원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체코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더 많은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비스트르칠 의장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중단됐던 직항의 재개, 비자 면제협정 일시정지 회복 문제는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인권·안보·국방 △교육·R&D 협력 △경제 및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사이버 공격, 허위사실 유포 분야 등에서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교육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또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5월 28일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있다.

국회의장 대표단이 기업가들을 동반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특히 두코바니 원전 입찰과 관련해 한국이 유망한 입찰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대화를 직접 중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하며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북한 대사관을 임시폐쇄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이 마무리된 후 박 의장은 영빈관인 리히텐슈타인궁에서 라텍 본드라첵 체코 하원의장과 업무오찬을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회의를 가짐으로써 양국의 우정을 확인했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박 의장은 또한 원전 수주에 대한 체코 측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본드라첵 하원의장은 한국의 배터리 투자 수주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원전에 대한 박 의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한국이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라고 보며, 상호 윈윈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날 오후 박 의장은 체코 순방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현지 동포 대표와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과 체코의 교역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체코에 계신 2천500명의 교민과 90여 개 한국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김병기·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4월 19일 의장 집무실을 예방한 윤호중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文정부 국정과제 잘 마무리해주시길”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윤호중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박병석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으셨다. 4선 중진의원인데다 정책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분이니 촛불 민심에 기초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많이 지도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의장은 “같이 상의하겠다”며 “곳간에서 민심 난다고 국민에게 최고 중요한 게 민생이고 그다음에 개혁이다. 두 바퀴를 잘 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과 개혁) 오른쪽, 왼쪽 바퀴가 아니라 앞, 뒤 바퀴로 표현을 바꿨다”며 “민생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5월 3일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정성 갖고 소통하면 국민 뜻 받을 수 있을 것”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3일 의장 집무실에서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4선 의원에 광역단체장과 법조인, 그리고 국회에 와서도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다 하셔서 일을 해 본 분이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며 “저와도 마음을 털어놓고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한다면 국민 뜻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2기 원내대표 1년은 민생과 미래를 관리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서 그 바탕 위에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며 “서로 적으로 두는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과제이지만, 국회 운영의 틀에서 보면 서로 간에 오랫동안 관습법, 전통으로 지켜왔던 국회 운영 기본 룰을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

김상희 국회부의장, 스페인·포르투갈 공식 방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5월 13일 메리첼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 강조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5월 12일부터 7박 9일간 스페인·포르투갈을 공식 방문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스페인·포르투갈의회 지도자 및 경제부처·기관장 등과 만나, 기후변화·친환경분야, 디지털 전환, ICT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부의장은 5월 13일 마드리드에서 메리첼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과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메리첼 바텟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인류 공통의 과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 우방국인 한국과 스페인이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친환경 전환,



5월 13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오른쪽 가운데)이 스페인 하원의회 파우 마리-클로스 외교위원장, 셀소 델가도 경제·디지털전환위원장과 합동 면담을 갖고 있다.

디지털 전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메리첼 바벳 하원의장은 “경제통상,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스페인 양국간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크다”며 “코로나19 이후 양국간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하원의회 파우 마리-클로스 외교위원장, 셀소 델가도 경제·디지털전환위원장과도 합동 면담을 갖고 “2019년 펠리페 6세 국왕 국민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4대 중점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펠리페 6세 국민 방한 당시,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협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경제협력,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다변화,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중점 협력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은 “한국이 ‘2050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이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파우 마리-클로스 외교위원장과 셀소 델가도 경제·디지털전환위원장은 “첨단디지털기술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인 한국과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며 “김 부의장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확대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월 17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국회방문단이 포르투갈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에디트 이스트렐라 국회부의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에디트 이스트렐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필리페 파세코 의원.

김 부의장은 이들 하원 위원장들과 향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인구감소 대응 등 주요 현안 관련 정책과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포르투갈 수교 60주년... 문화·관광·교육 등 교류 방안 논의

포르투갈로 이동한 김 부의장은 5월 17일 리스본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에디트 이스트렐라 국회부의장을 면담했다. 김 부의장은 “올해 한·포르투갈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르투갈이 올해 상반기 EU의장국인 만큼 한·EU 관

계 강화를 위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스트렐라 부의장은 신재생에너지, ICT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5월 18일 포르투갈 국회에서 포르투갈·한국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 7명과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했다. 김 부의장은 “포르투갈이 EU의장국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정의 차원에서 백신 접종 권고와 이행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우리의 국제교류재단 격인 카몽 이스칭을 방문했다. 주앙 리베이루 드 알메이다 청장을 만난 김 부의장은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를 강조하며 “90년대 말 폐원한 주한 포르투갈 문화원 재개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5월 18일 포르투갈 국회에서 포르투갈-한국 의원친선협회와 면담을 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왼쪽에서 네번째)이 5월 19일 포르투갈 페드루 시자 비에이라 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알메이다 청장은 양국 간 문화 및 교육 분야 교류 확대에 공감을 표하며 문화원 개설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의장은 5월 19일 페드루 시자 비에이라 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을 만나 포르투갈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정책과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 정책의 공통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비에이라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직항로 재개와 포르투갈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김 부의장에 전했다. 김 부의장과 비에이라 장관은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 계획 수립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우리 교민들과 기업 대표단과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위로하고 한인 사회와 진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5월 14일에는 스페인 현지 동포 대표단 및 지상사 대표단, 18일에는 포르투갈 한인 대표단과 각각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국내 입국 방역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현지 진출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순방 기간 동안 양국 의회 및 정부 측과 협의한 사항들이 국익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이규민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황승기 국회사무처 의회 외교정책심의관 등이 함께했다. 🍀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 포스터 종이부터 아껴요! 국회,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 시범 가동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이 5월 25일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 앞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는 5월 25일 의원회관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일하기 좋은 국회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 시범 가동식을 개최했다.

의원실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의원회관 각 층마다 설치돼 운영 중인 종이 포스터 게시판(총 148개소, 2천900면)은 행사 종료 이후 대량의 종이 인쇄물을 발생시킨다. 특히 포스터는 재질 상 재활용이 어려워 수거된 뒤 전량 일반쓰레기로 폐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가 기존 종이 게시판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을 새로 설치·운

영하게 된 것이다. 시범 가동되는 디지털 게시판은 2층의 10개소이며, 앞으로 전체 의원회관 게시판(148개소)이 디지털 게시판으로 교체될 경우 연간 113만 장의 종이 포스터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은 “많은 국민이 모이고, 법을 만드는 의원회관에서 종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는데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며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좌진 등 실제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운영방식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집]

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듣는 정국 운영 포부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새로 당선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당선 소감과 국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삶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제21대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21대국회의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됐습니다. 네 차례의 추경을 통해 피해 국민과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삶과 경제의 활력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굳건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챙겨 국민께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무너진 피해 국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회복시키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또한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우리 경제가 선도경제로 도약하도록 발판을 만드는 것도 국회에 부여된 과제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국 답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시급하게 요구하시는 것에서부터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도록,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화합의 국회로 나아가야

국민께서는 제21대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모

오고, 민생 현안을 잘 챙겨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1년이 훨씬 넘도록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몫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시기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본분을 다하는 입법부가 돼야 합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약속을 지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국민께서 바라시는 민생입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의회주의의 원칙을 지켜 운영되는 국회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국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더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도 차분하게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꼼꼼히 살펴서 가장 절실한 민생과제부터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

모든 국민께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해와 피로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당내에 백신치료제특

별위원회를 구성해 백신 공급과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5월 국회에는 손실보상 법제화라는 시급한 민생입법과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타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우리 경제가 분명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6%p 상승했고, JP모건도 한국의 성장전망치를 기존 4.1%에서 4.6%로 상향했습니다. 지난 4월 수출도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해 수출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카드 매출액 역시 증가하는 등 개인의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고귀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경제회복세가 국민의 삶의 진전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국회가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우리 경제가 선도경제로 우뚝 서게 할 한국판 뉴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 1년은 시련과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하게 지키며 위기를 잘 이겨내 왔습니다. 국회가 더욱 분발할 때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며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

“대한민국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삶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전 세계적 팬데믹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묵묵히 땀 흘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 어깨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1대국회가 국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개원을 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회가 민생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바람과는 달리, 제21대국회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여당은 절대다수의 의석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힘들게 쟁취하고 지켜온 민주주의의 원칙과 전통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87년 체제 이후 야당이 맡아왔습니다.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여당은 야당시절 법사위원장 자리를 악용해 사사건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정권의 발목을 잡았지만, 당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의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려는 것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은 애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결국 여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과 법안들이 국회 차원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 그리고 여야 합의라는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일명 '임대차 3법'은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난민을 양산했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중요한 인권을 말살시킨 반헌법적·반인권적 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시급을 다투는 민생현안이 아니었음에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 폭주를 저지르면서 무리하게 출범시켰습니다.

민생은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정부여당이 의석수와 권력의 맛에 취해 있는 사이에 민생은 거의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며,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했을 뿐인데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분노 풀려면 잘못 꺾어진 단추 바로잡아야

안타깝게도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무능으로 일상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민심의 분노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며 가장 두렵게 생각한 것은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의 분노를 어떻게 풀어드려

야 할지, 국민에게 어떻게 희망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그 고민을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제1야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대통령과 여당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일입니다. 수 차례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과정처럼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에 눈과 귀를 막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 폭주를 이어간다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순간도 지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저항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대로 간다면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서 있는 만큼,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21대국회의 잘못 꺾어진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여야 합의의 전통을 되살리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협상하고 소통하며, 언제라도 단호하게 제1야당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바로 잡고, 생각이 깨어 있는 젊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시대와 역사에 대한 사명,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의 삶에 안전과 희망 드리는 위원회 될 것”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남구을)

Q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여당 간사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행안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행정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운영의 중추 상임위원회입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안전과 희망을 드려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선 1년 남은 기간 그동안 내버려두거나 방치되었던 관행적인 법이나, 국민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치는 일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또 행정이 경제를 추동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직사회가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정 조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조속히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제21대국회 첫 1년 동안 행안위가 거둔 주요 성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행안위는 지난해 17개 상임위 중 법안처리 1위를 달성했고, 쟁점 법안들을 모두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충돌이나 파행 없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뜻을 모았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과 함께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법률에 주민의 참여권을 명시하고,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단체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했습니다.

또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교통 등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3년 만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에 참된 봄의 시작을 알렸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도 앞장섰습니다.

Q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A.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행안위가 여야 위원들과 소통하고 독려하면서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상임위로 평가받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의 총력 대응이 중요한데, 지자체별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경찰법 개정으로 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올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로 인한 성과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시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가 공직사회에 확실히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 고발의 남발로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경찰조직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 억울하거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고소, 고발이 아닌 가짜 고소, 고발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행안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Q 상대 간사님께 칭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박완수 간사님과는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의 선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생각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속마음이 통하는 면이 많습니다. 간사로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본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온화한 성품 때문인지 모든 사안을 합리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야 간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큰 어려움 없이 순리와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하는 모습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여야 함께 국가 발전과 민생안정 위한 주춧돌 쌓을 것”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Q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야당 간사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행안위는 국가의 행정체계, 지방자치제도 전반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 예산 등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 상임위원들 상호 간에도 각 소속 정당의 입장만을 앞세우기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협치하는 것이 행안위의 전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정부 여당에 협조할 것은 하면서도 국민의 눈

높이에서 야당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제21대국회 첫 1년 동안 행안위가 거둔 주요 성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제21대국회를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행안위에 회부된 소관 법률안은 약 1천500건으로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전체 발의 법률안 9천664건의 15%에 해당

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 법안 심사도 열심히 했고, 법안 처리율도 전체 상임위원회 가운데 1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과를 꼽자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겠습니다만, 중앙정부 권한의 일부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새로운 변곡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그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보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치안체계 전반을 새롭게 조정하고 정비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자치경찰제도를 최초로 도입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치안체계 확립을 가능하도록 했고, 수십 년간 논의되어왔던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도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를 설립해 국가 수사 사무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공직선거관리와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의혹을 다수 야기했던 사전투표 관리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른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우리 과거사를 국가가 인정하고 국민이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행안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A. 우리 행안위의 숙원이자 대표적인 과제들을 제21대국

회 개원 직후 다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굵직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도입되고 변경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청 간에 이견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서 행안위 차원에서도 중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시행착오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안위가 처리한 큰 과제들이 현장에서 안착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각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과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정부 부처 등 공공 분야가 코로나19 이후에 국가 정상화를 위해 각각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계획들을 마련하는 일에 행안위가 앞장서는 일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상대 간사님께 칭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재호 의원님과과는 개인적으로도 형님, 아우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태산같이 크고 넓은 합리적인 정치를 실천하시는 온화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서운 통찰력과 확고한 정치철학을 지닌 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박재호 의원님과 여야를 떠나서 국가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춧돌을 함께 쌓기를 희망합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경기 서남권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부천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정

경기 부천은 3기 신도시인 대장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이다.
고양 대곡과 부천 소사를 잇는 소사-대곡선이 완공되고 현재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이 건설되면 이곳은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봄이 차츰 물러나고 산과 들의 신록이 짙어지는 5월, ‘비타민아저씨’를
시작으로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거쳐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서영석 의원을
만나 그의 의정철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서영석 의원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향한 곳은 부천 원종사거리의 소사-대곡선 4공구 공사현장이었다. 이곳에서는 곧 개통 예정인 소사-대곡선 복선전철 원종역 공사가 한창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한참이나 내려가 도착한 지하 공사현장에서 그는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서 의원은 “경기 서남권에서는 일산 등 경기 북부로의 이동이 매우 제한적인데, 소사-대곡선이 개통되면 부천에서 일산, 안산 쪽으로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B, GTX-D 등 부천을 경유하는 여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까지 건설되면 부천은 명실상부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 원종과 마포 홍대를 잇는 원종-홍대선을 부천 대장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 추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장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선 주거 시설 뿐 아니라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의 선제 요건이 교통 인프라 조성이고, 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이 바로 ‘원종-홍대선의 대장 연장’입니다.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유물 발견된 고강선사유적공원



이어 서영석 의원은 취재진을 부천 오정구 고강선사유적공원으로 안내했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선사유적지다. 해발 88m의 청룡산 일대에 분포된 이 유적지는 청동기

● 소사-대곡선 4공구 공사현장에서





부천 고강
선사유적공원(왼쪽).
서영석 의원이 운영했던
약국에서

시대의 것으로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어 고대인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되고 있다. 1996년부터 7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제사 유적과 돌무덤 등 수천 점에 달하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다. 그는 “선사유적지에서부터 시작 되는 향토유적 숲길을 따라 걸으면 부천의 여러 문화재와 자연을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비타민 아저씨’와 생활정치



선사유적지 바로 인근에는 서영석 의원이 30년 넘게 운영했던 ‘구생약국’이 위치해 있다. 1988년부터 ‘구생약국’을 운영했던 그에게는 ‘비타민 아저씨’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1988년 당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온도계 만드는 공장에서 15세 소년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약국에서 폐건전지를 수거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호응이 높지 않아 고민하던 그는 폐건전지를 약국으로 가져오는 동네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줬고 아이들은 그를 ‘비타민 아저씨’라 불렀다. 이 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그는 1992년 환경처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이 일은 그가 처음 ‘생활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 서 의원은 “동네와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타민보다 더 큰 것을 동네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 그 후 그는 부천시의원(3선),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15년간 지역사회

회를 위해 일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겸직을 할 수 없어 지금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서 의원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을 ‘민원의 날’로 정해놓고, 약국 대신 지역 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부천 오정대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정대공원은 부천둘레길 과도 연결되어 있고 국제축구경기가 가능한 인조잔디 구장, 육상트랩, 분수, 산책로, 광장, 야생초 화원,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곳이다. 이날도 마스크를 쓰고 천천히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서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각자 코스를 걷고 인증샷을 찍는 비대면 걷기대회가 열려, 지역 주민 몇몇과 함께 삼삼오오 걷기대회에 참가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이어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신도시 예정지인 ‘대장들녘’을 찾았다. 그는 “대장신도시는 경기 서남권의 중심지로 자연과 문화가 융합된 산업문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대장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워줄 뿐만 아니라 서울 접근성이 좋아 부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의원은 “서울 마곡지구, 인천 계양 등 다른 신도시와도 인접해 있어 신도시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여성소비자신문’이 뽑은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5년간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내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은지 물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훨씬 전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지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과 필수노동자TF 정책추진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갑의 횡포와 을이기에 겪는 불공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들을 도와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

부천 | 글 박민선 사진 임진완

● 대장신도시가 조성될
대장들녘에서





장혜영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성군)



6월호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추경호 의원이다. 그를 추천했던 장혜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라면 앞장서서 예산에 반영해주시다"고 칭찬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타임지도 인정하 청년 정치인에게 칭찬을 들으니 참으로 영광"이라며 미소 지었다. "장혜영 의원님과 우연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들을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니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경청하고 고민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네요."

‘정치’란 국민이 필요한 것을 면밀히 살피는 것

‘경제·금융 정책통’, ‘외유내강 조율가’... 당내 경제 통으로 유명한 추경호 의원은 최근 신임 원내수석부 대표로 선출됐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과 정치입문 후 당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한 추 의원은 평소 여

야 구분 없이 친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3년간 경제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경제·금융 등 정책 조정에 힘써 왔습니다. 관련 입법 등을 위해 국회를 찾아올 일이 많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급한 과

제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공들여 정책을 빚어도 번번이 국회 문턱에 걸렸죠. 국민의 이익보다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면 직접 가서 한번 바꿔봐라'는 권유를 많이 해주셨고, '직접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보자!'고 정치입문을 결심하게 됐죠."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반도체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이 되는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출발한 자산 불평등은 청년들의 좌절감을 담은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가상화폐 투자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금융위원장이 훈계 아닌 훈계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 의원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관련 정책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 전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역할에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민생을 위한 입법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한결같이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매달 빠짐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찾아와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이런 국회의원은 처음'이라며 칭찬해주실 때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큰 보람을 느낍니다." 🍀



"박홍근 의원을 칭찬합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중랑구을)은 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에 배울 점이 많은 동료 의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특위 여야 간사를 맡아 밤샘 회의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언제나 엄청난 양의 자료를 사전에 공부하고 오셔서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지향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데는 서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하는 정치를 함께 펼쳐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글 윤성혜 사진 임진완

무 괴 아 심 (無 愧 我 心)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지침이 되어준 가르침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천안시병

17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다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이정문 의원의 좌우명은 ‘무괴아심(無愧我心)’이다.

“무괴아심은 중국 명나라 개국공신이며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유기의 말입니다. 원문은 ‘기능진여인의(豈能盡如人意)-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있겠는가. 단구무괴아심(但求無愧我心)-다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소 고전이나 시 읽기를 즐긴다는 이정문 의원은 사서 중 하나인 맹자와 윤동주 시인의 시를 특히 좋아한다고 했다.

“맹자에 군자삼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자(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첫째는 부모가 다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둘째는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운동주의 서시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나 운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무괴아심이라 생각되어 제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항상 살펴보게 되는데요. 무괴아심이라는 좌우명이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하는 지침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2012년 당시 재선 의원이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지역구 청년위원장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한 이정문 의원은 변호사 생활과 정당 활동을 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다. 그러다 2020년 지역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내 경선에 참가하게 됐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어려운 국민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 주력”

국회 입성 후 이정문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로 ‘LH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장치가 마련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법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200곳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얼마나 등록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의 접근성 제고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교통 환경 조성을 과제로 꼽았다.

“독립기념관이 천안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해 접근성을 제고하면 더욱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와 1번 국도 등 주요 도로가 도시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천안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도 주요 과제입니다. 수도권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을 추진하고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평소 지역에서 봉사활동과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많이 보고 들었다는 이정문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법안 마련에 힘을 쏟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실천과 결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썰매 명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이용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썰매의 찬란한 성공 소식을 진두지휘했던 이용 전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총감독이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용 의원은 “체육인들의 삶을 위해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후 그는 ‘최속헌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등 체육계를 위해 뛰고 있다. “앞으로는 체육인들 뿐 아니라 울분에 찬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펼치고 싶다”는 이용 의원을 국회보가 만났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키운 국가대표 감독

이용 의원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루지 국가대표 출신이다. 2011년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윤성빈(스켈레톤) 선수와 은메달을 딴 원윤종·서영우(봅슬레이 2인승) 선수를 키워냈다. 2019년에는 한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동계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이다.

썰매에 인생을 걸었던 그는 정치는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한다. 그랬던 그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은 '체육계 현장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에게 제가 심 없이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은 비인기종목이지만 올림픽에서 메달만 따면 경기장, 훈련장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요. 올림픽에서 드디어 메달을 땀습니다. 정말 자부심이 컸죠.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장이 폐쇄됐죠.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진을 찾아 수없이 호소했어요.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도저히 선수들에게 낫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겠다, 현장에서 백날 외쳐봤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인들의 처우 개선 위해 정치 도전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막막했다. 그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직접 신청했다. 공천관리위원회 면접도 조용히 혼자 준비했다. 그는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전북 전주가 고향이고 한때는 민주당을 응원했던 사람이지만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닌, 체육인 후배들을 위해 쓴 소리를 하고 싶어 야당을 택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이른바 ‘최속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속현법에는 △체육계 폭력 예방조치 △가해자 제재 강화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담겼다. 최속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소속 팀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0일 만이다.

이용 의원은 지난해 7월 최 선수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그는 최 선수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대한철인3종협회 사무국장을 면담하고, 법

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직접 최 선수 아버지가 있는 경북 칠곡으로 찾아가 장시간 설득했다. 이후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우리 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원내대표단에 혼자라도 상임위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초선인데다 첫 상임위 회의라 발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막막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쪽 앉아있고 우리 당은 나 혼자라 압박감도 굉장했지만 그 때는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 오직 그 생각 뿐이었습니다.’”

이용 의원은 최근 보람 있었던 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대면 훈련’이 인정된 일을 꼽았다. 그는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 선수들은 훈련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훈련을 못해 수당이 나오지 않았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편의점이나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훈련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 비대면 훈련도 국가대표 훈련으로 인정하는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용 의원은 앞으로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가 대표팀 총감독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건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라고요. 최근 서울시장 선거 유세현장에서 울분을 토하는 수많은 2030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공감하고,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소리를 세상 밖으로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인공지능과 국회도서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인공지능(AI)이 모든 영역에서 구축된 전통적인 틀을 깨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도서관=책'이라는 틀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책 없는 도서관을 표방하는 도서관도 탄생했다. 일부 대학에선 도서관을 '학술정보원'이라고 부른다. 대학의 '도서관학과'는 '문헌정보학과'로 바뀐 지 오래고, 이제 '정보과학과', '데이터과학과' 등으로 개명하는 추세다. 이런 도도한 흐름 속에서 국회도서관도 오랜 관습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공공도서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국회도서관에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부수적인 업무다. 국회도서관의 최고 사명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을 지원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입법안은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실에 유용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선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국회의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책을 통해 정보가 전달됐다. 그러나 책을 통한 정보 취득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한 정보는 몇 쪽에 불과하지만,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선 방대한 두께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정보를 분해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장서 디지털화로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 모색

책 내용을 분해하는 첫 걸음이 디지털 정보로의 변환이다. 국회도서관은 지난해부터 연간 150억 원을 투입해,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한국판 뉴딜정책인 '지능형 정부지식 플랫폼' 과제로 선정돼 2025년까지 총 9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4월까지 약 3억 1천 면을 디지털 정보로 구축했고, 오는 2025년까지 주요 자료 대부분에 대한 디지털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디지털 정보는 '빅데이터'가 된다. 인공지능의 또 다른 말은 '빅데이

터다. 빅데이터 없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흔히들 이야기 하지만, 빅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공지능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회도서관의 역할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한 데이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단어별로 분해돼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책을 볼 필요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 수많은 장서 중 법인세 정보만을 엮어 새로운 책으로 만들 수 있다. 법인세율 조정이 주는 경제적 효과, 해외 연구결과, 각국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 한 권이 불과 몇 분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디지털 자료 변환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변혁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자료 분석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입법자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AI 보좌관', 'AI 비서관'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입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반응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들의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은 SNS를 통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르고스'라는 이름의 시스템이다. 아르고스는 개별 국회의원의 활동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SNS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몇 초 내에 파악한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가공할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기술은 전문영역이어서, 대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아마존 등 민간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기술을 개발 중이다. 국회도서관도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직원들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은 외부 전문가의 인공지능 강연과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돼 세상이 변하는지 배우는 시간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이미 작고한 가수가 현 시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인공지능이 만든 미술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동적인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코앞에 와 있다.

이뿐만아, 이미 방송가에선 유명 아나운서의 활동을 인공지능으로 연출하는 세상이 됐다. 정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으로 활동을 한다면, 그 범위는 보다 더 넓어질 것이다. 특히 시간에 쫓겨 의정 활동을 하는 정당 대변인을 인공지능으로 만든다면, 'AI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AI 국회의장'이 만들어진다면, 국회의장의 활동범위도 무궁무진해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빅데이터로 인해, 국회의 기능과 활동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날이 멀지 않았다. 🍷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열어 각계 의견 청취



송수환 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으나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되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 여건 아래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현금지원과 금융지원 및 전기료감면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했으나, 소상공인들은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5월 25일 열린 입법청문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 25건 등에 대해 소상공인 대표, 정부(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법률 전문가 등의 진술을 청취해 법률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청문회에서 A 스타디카페 대표, B 코인노래연습장 대표, C 음식점 대표, D 여행업 대표 등은 소상공인 영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큰 어려움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사회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협력한 공헌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역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의 전 과정이 보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손실보상의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소급적용(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중복지원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 개별 소상공인이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 기존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서도 소급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 △손실보상·피해지원 대상에 여행업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 파산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손실보상 소요 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 및 국가 재정 활용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피해지원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2050 탄소중립,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5월 3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의 화두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었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없이는 기후온난화 대처가 불가능한 만큼 원자력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

포를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과 탄소중립 정책이 양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적응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하며, 어느 나라든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지 않는다. 부존자원 등 현실을 무시하고 전원계획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에너지 정책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진단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현재 탈원전 정책은 탈탄소·탄소중립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이 불리한 우리나라의 처지에도 배치되

는 정책으로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전력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무탄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원자체가 부족해 재생에너지 여건이 안 된다”며 “원자력발전소 없이는 기후온난화 대처가 불가능한 만큼 원자력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포는 많은 대가가 동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독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태양광과 풍력의 특성,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는 전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원전 없는 탄소 제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에너지의 특성과 에너지 믹스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탄소 제로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했다.

한무경 의원은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이며 모든 국가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 토론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4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개·변조 제품의 유통 등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 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했지만 음식물 찌꺼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가정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20%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따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도 상당수 출시, 이를 숨긴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돼 불법 제품을 선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정용 오물분쇄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 교수는 “오물분쇄기의 부분적 허용으로도 일부 하수처리시설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최대 300mg/L까지 치솟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에서 더 이상 보급하게 되면 국내 하수처리 수

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조·판매자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은 배 교수는 판매자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현행 법규와 성능에 대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환경 중심의 법리·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사용을 허가해줄 때부터 예견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에 버릴게 아니라 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 원료로 사용한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폐기물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 등의 가스로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등이 해당된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활용한 연료로 움직이는 바이오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확산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와 함께 환경오염 개선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로 버리는 것을 차단해 환경오염을 막고,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활용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김상희·김성환·김영배·김정호·양이원영·이성만·이소영·이용빈·전혜숙·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국제협력의무 등 해양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해선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인근 주민과 타국 입장을 고려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라며, “정상원전은 7개 가량 핵종이 배출되는 것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는 64개 핵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사고원전”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설계 중심의 원자력 추진파, 핵공학자가 아닌 생물학, 세포학, 분자생물학, 방사선화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방침과 관련한 정부 대응방안 강구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

예방주의와 국제협력의무, 정보제공 등 해양법상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도쿄전력이 탄소 검출을 2020년에야 밝힌 예를 들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방사성 오염수 정보가 신뢰도와 투명성이 매우 낮다”며 “우리 정부가 방출저지조치 목표에 단일한 입장 견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소비, 생산, 유통, 어촌 및 관광부문에 나누어 우리 수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분노를 넘어 큰 좌절을 느낀다”며 “정부에서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이 소비 위축을 최소화할 최고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언론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잘 조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주장했고 하겠다는 내용들의 예외사유가 여러 번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원안위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문을 받을 때도 균형을 잘 맞춰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고 5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공청회

김병욱·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일중·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5월 10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 단체의 입장을 청취하고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천90만 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의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가입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 측이 직접 전자 문서로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보험업법’을 개정하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건강보험심의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서류를 보내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전산화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보험사의 의무를 의료계에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전산화에 찬성하는 보험 업계·소

비자 단체와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여러 차례 조사 해본 결과, 진료비가 소액일 경우 소비자들이 청구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을 크게 느껴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험금)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구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의 시간, 노력,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계약 관계의 이행 주체는 보험사인데 의료기관이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은 “보험업계는 마치 의료계가 반대해서 법안이 안되는 것처럼 말한다. 실제로 실손보험을 간소화하려면 보험사와 가입자 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청구 전산화는 포맷이 통일돼야 하는데, 동네 의료기관은 전자시스템 관련 기본 틀이 잘 갖춰지지 않아 법안을 수용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지금처럼 보험 청구 절차가 불편한 것은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 제한이다. 전국 9만7천여 개 의료기관의 협조 없이는 간소화는 불가능하다. 법안은 의료기관 협조를 약속하는 입법에 불과하다”며 “전산화는 되레 보험업계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인프라 구축에만 큰 비용이 생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도 “의료기관은 이미 의료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다만 전자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다. 정보유출 문제를 우려하지만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다”며 “중개기관이 비급여 심사기관화 할 것이란 우려 역시 처벌규정으로 막아됐다. 우려를 해소할 장치는 이미 충분하다. 종이서류를 형식만 전자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강국임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옛 방법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IT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식 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원하는 국민이 80%였던 만큼, 적어도 청구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10여 년 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시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효율은 물론 국민 불편도 없앨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5월 10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설

물유지관리업이 폐지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시설물 안전 중요성을 강조한 국회가 건설산업 개편 방향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업무 범위로 하는 업종을 말한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성을 가진 신규업종으로 독립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늘어나고 건설공법의 발달로 인해 초고층 빌딩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물이 급증해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어 시설물유지관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노후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 기술의 개발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 업종에서 폐지하고 일반 건설업의 기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유지관리산업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문서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시설물유지관리

업은 예방적 유지관리와 사후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중 피에스엔지니어링 대표는 “선진국들은 건설분야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 안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준우 전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지를 위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진홍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남기 동명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하고 오히려 이를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구분하는 방안이나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개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지킴이로 사회 발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람이, 사는, 집이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윤미향·안호영·임종성·김영진·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14일 이주노동자들의 숙소 등 주거 환경의 문제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는 작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서 잠자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건으로 공론화됐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개별 사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숙소 모델 구축 등 숙소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대책 중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현재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홍동기 경기도청 외국인정책과장은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외국인노동자 기숙시설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등 단계적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있는 구체적 사업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정토론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들이 많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기숙사 모델 등 숙소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농축산업 사업주 등이 노동자 숙소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500개소 지원에 불과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경기도처럼 실태파악을 통해 공공형 숙소 모델 등 숙소 지원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됐지만 지원 대상이 500개소밖에 되지 않는 등 외국인근로자 주거 대책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해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며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윤미향 의원은 “흔들리는 바다 양식장 위, 시끄러

운 공장 옆 컨테이너, 외딴 논밭 위의 비닐하우스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집”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 주에게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많은 고민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양기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17일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신도시 위주의 공급 대책이 아니라 구도심과 역세권 등에 대한 활성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논의됐다.

허종식 의원은 “옛날에는 4인 가구 32평 아파트가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6~70%”라며 “주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욱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제에서 “2017년 5월 6.4억이던 서울 아파트는 현재 11.4억”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급등 원인은 공급부족, 규제정책부작용, 과잉유동성 상승기대감”이라며 “주거복지차원의 ‘수요자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방향은 가격상승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가격상승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주택 공급량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량 조절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신규 재정투자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은 “저금리 시대,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시장이 존재하는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과 세제 등 종합적인 문제”라며 “주택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 '가사노동자법' 등 민생법안 98건 의결

국회는 5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68년 만에 가사노동을 정상화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5·18보상법' 개정안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법률안은 최근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계좌 대여 알선·중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안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뿐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하고,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또 현재 투자회사형 펀드에만 적용되는 일반사무 관리회사의 등록 의무를 모든 형태의 펀드로 확대하

고, 기존 증권사의 업무 추가 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추가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번 법률안의 개정으로 시세조종행위, 불법 계좌 대여 알선·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2021년 이후 서민 신용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신

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법률안이 개정됐다.

법률안은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 대상을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全)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고, 현재 재원별로 구분돼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재원 운용의 효율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등 일부가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공법단체 출범에 차질이 생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법률안은 종전 각 사단법인 회원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가 원활하게 출범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 고취 및 회원의 권익 증대가 기대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작성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내년엔 시범 실시 후 2023년도 예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단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

지 않고 있었다. 또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제재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조금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제재 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업체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계약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어 법률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 등도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보조금의 부정 운용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증가산금이 월 단위로 부과돼 체납자가 부주의로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1개월분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고, 부과요율도 월 1.2%로 국세 납부지연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개정됐다.

개정안은 증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부과요율을 인하했다. 현행 월 단위 부과에서 일 단위 부과로 개선하고 부과요율을 월 1.2%에서 일 0.025%(월 0.75% 상당,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수준)로 인하하

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증가산금이 인하돼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법률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고 성적이나 신용 등의 대출 요건을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일반 대학원생을 포함하되, 전문·특수대학원생은 제외했다.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했다. 또 파산 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면제, 파산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채권에 대한 면책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전담 보건교사가 없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보건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발생한 방송통신재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통신재난관리심의회를 신설해 통신 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

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시 통신망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요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현행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재난 예방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요건인 ‘임원급’의 정의가 모호하고, 신고 대상이 광범위하며, 겸직 제한의 범위가 넓어 기업의 의무 이행 부담이 가중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및 겸직 가능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및 겸직 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및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의무 이행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는 국가지식정보의 통합 제공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지식정보 및 교육 콘텐츠 등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제정됐다.

법률안은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한 통합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개별 플랫폼에서 분산·제공 중인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지식정보의 개방·공유·확산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대면 융합 지식서비스 산업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은 다른 민주화운동 보상법과 비교해보면 관련자 범위가 차이가 있고, 현행법이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규정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해 정의했다. 또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를 규정했다. 아울러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에서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 등을 차감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5·18 관련 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 따른 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각종 기관 등에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확인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금융권에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역시 정보주체

가 확인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주민·건축물·자동차 등의 기초 데이터는 여러 행정기관 등에서 활용하는 정보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 행정기관마다 다른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해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기준 데이터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원하는 대로 확인하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정보의 편리한 관리·활용이 가능하고, 행정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가 정확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통신망법안’(행정안전위원회)

법안은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해양경찰·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통신망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제정됐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재난 대응·복구과정에서 재

난안전 관련기관 간에 상황 지시, 보고 및 전파를 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유 발생에 대해 그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용 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행위로 합격·임용된 자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사고·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사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요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2년 연장,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해, 대민 접점에서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공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내

성비위 근절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관련 금지행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상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화재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화재조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됐다.

법률안은 법률 제명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화재조사 업무를 화재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며,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정했다. 또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형화재의 경우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종합정보 수집·활용을 위해 감정기관 지정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화재조사

의 권한·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 체계적인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문서와 공무상 생산한 각종 기록물 등을 매년 평가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언어의 공공성 향상과 올바른 국어 보급 및 순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스마트관광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스마트관광 서비스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육성 정책으로 스마트관광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고,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를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관광산업의 외연 확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 궁극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주가 장기간 휴장함에 따라 경륜·경정 선수들의 생활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용자들의 비대면 수요가 증가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경주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차투표권 발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주사업자는 승차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를 위해 이용자 보호조치 및 매출총량 준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륜·경정 선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대면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클럽법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은 전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하고,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기존 엘리트 선수 양성을 목표로 하던 체육정책이 생활체육의 보편화·활성화로 전환되어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선진국형 스포츠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농업박물관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등 타 분야에 대한 박물관은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농업·농촌에 대한 박물관은 없어 국립농업박물관의 건립·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해 제정됐다.

법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국립농업박물관은 경기도 수원시의 구 농촌진흥청 부

지에 건립되며,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번 제정으로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돼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해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따른 법령 필요성 판단 절차를 구체화해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안전성 검증 등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효력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임

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가 중단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요청 대상을 구체화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데이터 제공 및 분석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 사회보장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나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

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개선과 지원범 위 확대계획을 고려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 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를 같은 하는 과징금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동 과징금 세입 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세입 확충을 통한 재원 확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집행이 기 대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2020.12.29.)에 따라 도입 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신규 기능(민간 기관을 통한 신청 지원)을 재난적의료비 신청 시에 도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인용 조문을 정비해 법체 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기관에

서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과 관련한 인용 조문을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 맞춰 정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보다 원활하 게 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분의 개별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납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 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 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 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또 체납분의 개별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하 되,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 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 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 확대 등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자녀의 CCTV 영상 열람 시 고액의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사실상 CCTV 영상 열람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현재 예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과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위생관리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어린이집 위생관리의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하려는 부모가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때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해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소득·재산 수준을 판단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해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소요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축 및 별동 증축하는 시설 등의 경우 의무인증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무인증시설이 재인증을 받지 않고 방치되

는 등 의무인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또 최근 인증기관 및 인증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체계적인 인증 업무 관리·지원을 담당하도록 인증 운영기관을 둘 필요성이 있고,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BF인증제도 참여가 저조해 인증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의무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했다. 또 인증기관 관리·지원,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증 관리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수수료 감면을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도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은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안은 녹색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제정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녹색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 일원화, 기존 댐시설의 노후화,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피해발생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댐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져 개정됐다.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해 종합적인 댐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 및 가뭄의 예방과 관련된 사항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화된 댐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댐관리 시 홍수·가뭄의 예방에 유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가사근로자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 제정됐다.

법률안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계약과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특례를 뒀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시간,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고,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으로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현행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향후에는 인증기관에 고용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리 고영선

국회, 국무총리·장관·검찰총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실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5월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전 분야에서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의 접목 등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하고 각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공급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김영식 위원(국민의힘)이 과학자로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 안전성에 대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뤄지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술로는 위험성이 더 크다”며 탈원전 정책 방향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전의 밀집도가 높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내 탈원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6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또 이동통신의 28㎒ 대역 주파수 서비스의 기업간거래(B2B) 서비스가 가능하겠냐는 운영찬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서비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 성숙도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윤 위원이 “정부가 28㎒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 때문에 억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투자를 계속하라고 하는 게 과연 맞냐”라고 질의하자 임 후보자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후 약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지명 인사권자의 의견을 듣고 나서 여러 고민이 있었다. 제가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의 경험을 살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NST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박대출 위원(국민의힘)의 지적에 “NST에 문의한 결과 임명 당시에만 당원이 아니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임 후보자는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제1저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본인 논문의 학술지 중복 게재에 대해선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 따르면 석·박사 학위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학영)는 5월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문승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하고 더욱 견고한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 이른 시일 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안착시키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후보자는 “그간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산 전원 인프라 확대, 석탄과 원자력 발전 감축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홍정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정책이 있어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정부 내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산

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개가 최근 추진됐는데 이 중 인력양성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핵심기술사업도 공고가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김정만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최근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대기업 외 팹리스와 중소·중견 파운드리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자동차 반도체가 발전하지 못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잘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고, 상반기 중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정권이 바뀔 경우 탈원전 등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임태영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자력 산업을 둘러싼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는 김성환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목표보다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5월 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노동이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노동환경도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전망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

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안전 전담 조직 확충 등 인프라도 강화해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쟁점이 됐다. 안 후보자는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냐는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2018~2019년까지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수용됐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급격한 충격으로 매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이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하자 안 후보자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탓이라는 김 위원의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기는 그렇다(어렵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관한 김웅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증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뒤에도 고용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면 (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안 후보자는 포스코에서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노웅래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안전 여력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인식이 바뀌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5월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 기로에 있으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LH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건설현장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안전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현승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입법 취지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또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신공항 건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며 향후 추진 상황을 알려 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 “알겠다”고 답변했다.

노 후보자는 조오섭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데 대해 “공정위와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박영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하고 매각하게 됐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하며,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인사청문특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5월 6일과 7일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 여망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집단면역 달성 △부동산 안정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회복 △청년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통합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히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김병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줘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행기구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 묻자, 김 후보자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조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 국가가 이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재산세·종부세는 전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라는 일부 반발이 있어 장기간 보유한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기록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과거 저서에서 학교폭력 전력을 고백한 데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이라고 사과했다.

이틀째인 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자신의 딸과 사위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특혜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위는 독립 주체”라며 “그 특혜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집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오기형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법 집행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는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이해”라며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총리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치르고 있다. 대선 출마는 염두에 두지 않는 건가”라는 조수진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국무총리직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30년이 조금 넘었다”며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5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며 “검찰이 정치, 경제,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과거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월 2천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받은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는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금액은 세전이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등 1천700여만 원을 납부했다. 내년에도 3천 만원 정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느냐는 전주혜 위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또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과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검찰이 청와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느냐는 전 위원의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당연히 새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전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전임 총장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

정리 박민선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직선제로 변경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지난 3월 24일 본회의에서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은 초기에는 대통령 임명제로 시행해오다가, 1988년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됐고, 2009년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이 법 의결 전까지 이어져 왔다.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은 직선제로 인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집중과 그로 인한 금권선거와 같은 선거과열 등의 문제가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매번 문제되어 도입됐지만, 한편으로는 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돼 이들에 의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것도 사실이 었다.

국회에서도 지난 제19대국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20대, 21대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정부 측에서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되면 회장의 대표성 확대가 회장 권한의 집중·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지역 농협별 조합원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조합장 1인이 1표의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면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빛을 보게 됐다.



권영진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요 내용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직선제 전환이다. 그동안 정부가 직선제 도입 반대 논리로 제시했던 직선제로 선출될 농협중앙회장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강화하고 중앙회장의 권한 행사의 투명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를 위해 회장의 업무를 회원과 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적 활동으로 명확히 하고, 회원조합지원자금,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등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과 관련된 분야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해 직선제 회장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게 됐다.

둘째, 농협중앙회장 선출시 부가의결권의 적용이다. 부가의결권이란 중앙회 회원이 총회에서 정관 변경, 회원 제명, 임원 등의 선출 및 해임 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1표에서 3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조합원이 1만 8천73명인 조합과 107명인 조합이 공존하고 있어 조합원 수가 약 170배 차이 나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의결권을 1표씩만 행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2표까지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때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그 기준을 3천 명으로 하도록 해 소수 조합원을 가진 조합의 대외

적 의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수 조합원을 가진 조합의 의결권도 고려하는 등 균형감을 유지하도록 했다.

셋째, 농협중앙회장의 부당간섭금지 규정 배제다. 당초 정부 측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시 전국단위 선거과정에서의 이해관계 확대에 인한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권한 명확화와 더불어 농협중앙회장의 부당간섭금지 규정 도입 필요성을 제기,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나 자회사의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부당간섭금지 규정은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하도급 관계처럼 우월적 지위 남용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개정안에서 중앙회장의 대외적인 대표활동 이외의 실질적인 업무를 현행 위임관계에서 조합감사위원장 등의 고유업무로 전환함으로써, 직선제 도입에 따른 중앙회장 권한 집중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최종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의결된 것이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2009년 대의원 간선제 방식을 도입한 지 10여 년 만에, 1988년 민주화 시절 농협 출범 당시 도입한 중앙회장 직선제를 되살려 지역 협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됐다. 협동조합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다시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향후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 따라 결선투표제 폐지 등 선거 방법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네시아 의회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윤성민
국회 인도네시아 주재관

인도네시아 의회(이하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대표회의를 기준으로 한다) 구조는 독특하면서도 나름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의장단은 의사일정부터 입법현안까지 의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실질적 회의체로서 기능한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인도네시아 의회의 의장단 및 위원회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의장단

인도네시아 의회 의장단(PIMPINAN)은 의장 1인과 부의장 4인으로 구성된다. 의장단 회의는 수시로 열리며 의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결정된다. 의장단 중에서도 특히 부의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지위와 역할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통상 의장은 최다수당의 몫이지만 부의장은 제2당부터 제5당까지 각 당에서 선발된다. 의장단은 국회운영위원회(BAMUS) 위원장단과 동일하다. 즉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위원장(우리의 위원회 간사에 해당)이 된다.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부의장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부의장 4인은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컨대 제1부의장은 정치·안보 분야를 조정하는데 그 아래 제1분과위(국방·외교·첩보), 제2분과위(내무·지방자치·행정개혁·선거), 제3분과위(법률·인권·치안), 의회간협력위(BKSAP) 및 법제위(BALEG)가 편제되어 있다¹⁾. 이같은 구조 아래 의장단



본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단(5인),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이 전열 중앙에 있고, 의장 양 옆으로 부의장 4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스나얀 의회의사당 전경

회의는 수시로 열리며 이를 통해 의사일정부터 입법현안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당의 입장과 각 분야별 이해가 조율되도록 했다. 본회의가 열릴 때에도 의장단 5인은 의장단석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렇듯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의장단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능한다.

분과위와 상임위로 이원화된 위원회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위원회는 분과위와 상임위로 이원화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11개가 있다²⁾. 각 분과위는 소관하는 정부부처와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제1분과위는 국방부·외교부·국정원을 소관하면서 관련 분야에

서 입법, 예산심의회정 및 행정감독 등 의회의 고유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상임위원회는 7개가 있다³⁾. 우선 (정부와는 관련 없는) 의회의 자율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다. 예컨대 의원의 징계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위(BKD)나 의회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총무위(BURT)가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 분과위와 별도로 상임위를 설치하는 이유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 분과위가 가진 다양한 전문성과 대표성의 조화가 필요한 경우다. 예컨대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위(BALEG)나 국가예산의 총량과 세부내역을 결정하는 예산위(BANGGAR)가 그것이다. 이런 유형의 상임위는 그 속성상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각 분과위 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의원이 (분과위 간에 겸임은 불가능하나) 분과위와 상임위 간에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가령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인도네시아 의회 구조에서는 제3분과위(법률·인권·치안)와 법제위(BALEG)로 이원화되며 각 위원회 간에는 겸직이 가능하게 된다. 🍯

1) 제1부의장은 정치·안보 분야, 제2부의장은 산업·발전 분야, 제3부의장은 국민복지 분야, 제4부의장은 경제·금융 분야에서 각각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2) 11개 분과위는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국방·외교·첩보), 제2분과위(내무·지방자치·행정개혁·선거), 제3분과위(법률·인권·치안), 제4분과위(농업·산림·해양·수산·식량), 제5분과위(교통·공공사업·공공주택·기상), 제6분과위(통상·산업·투자·중소기업), 제7분과위(에너지·광물자원·연구기술·환경), 제8분과위(종교·사회·여성), 제9분과위(노동·이주·보건), 제10분과위(교육·문화·관광·청소년·체육), 제11분과위(재무·금융·개발계획).
 3) 7개 상임위는 다음과 같다. 운영위(BAMUS), 의회간협력위(BKSAP), 법제위(BALEG), 윤리위(BKD), 총무위(BURT), 예산위(BANGGAR), 결산위(BAKN).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렸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8.28.]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의 첨단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등을 사람에게 이식해 손상된 인체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기술이다. 첨단재생의료는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새로운 치료대안이 될 수 있고, 성공할 경우 한 번의 치료로도 효과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통해 미래 의료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지난해 8월말부터 시행됐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내용과 성과, 보완점 등을 알아본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받을 수 있는 임상연구 제도 마련

이제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소감에 대해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선천성 결합 환자에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으로 기존 방법으로는 치료

가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새로운 치료법이 절실한 환자들이 국가의 안전관리체계하 임상연구의 형태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가 마련됐다. 재생의료 임상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실시할 수 있다. 또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을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이상 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 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임상연구 지원예산을 확보(약 99억 5천만 원)하고,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주요 정책적 사항을 총괄하는 정책심의위원회와 임상연구 계획의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실시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 1월 범정부 차원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5개년(2021년~2025년) 기본계획을 발표해 글로벌 수준의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2개 상급종합병원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재생의료실시기관 2차 지정 및 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임상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바이오횰약품 개발 기간 단축 기대

산업계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으로 일반적으로 비임상부터 상품화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초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 기관과 함께 재생의료 정책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22개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는 당뇨, 골관절염, 흑색종 등 난치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 요소를 대체, 복원하는 등의 획기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분야이지만, 한편으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나 부작용의 초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우려와 불안도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말하는 한편 “법 제정 당시



〈 보건복지부의 설명 이미지 〉

이런 점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치료기술이 무분별하게 상용화되지 않도록 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임상연구의 형태로 제한해 해외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접근하는 경로가 없고, 임상연구를 통해 생성된 자료가 의약품 인허가 절차 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삭제되는 등의 수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보완점에 대해 이 사무관은 “장기적으로는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재생의료 시술과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치료 접근성의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 김영선

재난 상황 속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2021-03-24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2021-04-29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NEWS

박병석 국회의장,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18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표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병상을 마련한 일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너무 많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제142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화상회의로 개최

‘제142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국제의회연맹(이하 IPU) 총회는 1984년부터 정례적으로 연 2회 열렸으나, 2020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됨에 따라 올해 IPU 총회는 역사상 최초의 화상회의로 5월에 진행됐다.

이번 제142차 IPU 총회는 ‘오늘의 팬데믹 극복과 내일의 더 나은 회복: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 130여 개 국가의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 대표로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단장으로 윤희숙(국민의힘)·강선우(더불어민주당)·장혜영(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5월 26일 열린 총회 본회의에는 남인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3법 개정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우리 대표단은 제142차 총회 본회의뿐 아니라 본회의 이전에 개최된 제2·4상임위원회 공동회의, 제3상임위원회, 여성의원포럼 회의 등에 참석했다. 4월 27일에 개최된 제2·4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UN위원회) 공동회의에는 윤희숙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코로나 극복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IPU는 1889년 창설되어, 현재 179개국 의회가 회원국으로 가

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의회 관련 국제기구다.

대한민국은 1964년 가입 이래 전 총회에 참석하는 등 IPU를 통한 의회 간 교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국회방송(NATV), 채널 단일화 추진

국회방송은 그동안 시청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의 채널 번호를 IPTV는 65번,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165번으로 단일화를 추진해 왔다. IPTV는 이미 65번으로 방송되고 있는 KT올레, SK브로드밴드에 이어 현재 172번으로 방송되고 있는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65번으로 단일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5월 20일 165번으로 변경되었으며, 케이블TV LG헬로비전, 현대HCN은 6~7월 중 165번으로 변경 예정이다. 국회방송은 연내 번호 조정이 힘든 케이블TV 일부 사업자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채널번호 조정 협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5월 11일 '독일의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0호, 통권 제15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198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자원관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친환경적 폐기물관리 입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확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부는 1986년 '폐기물관리법'과는 별도로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지만 발생원인의 방지와 예방보다는 폐기물 처리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순환경제법(KrWG)' 제23조에서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품을 개발·가공·처리·유통하는 주체가 생산 제품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제품은 제조와 사용 시부터 가급적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도 환경 친화적으로 회수 또는 처분하는 것이다. 독일과 같이 '순환경제(Kreislaufwirtschaft)' 개념을 도입해 종래의 소비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폐기물 관리와 처리에서 생산을 포함하는 경제관점에서의 폐기물 관리로 전환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도서관, 제15차 'S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은 5월 11일 'SI, 언어의 장벽을 깨다'라는 주제로 제15차 'S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통번역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NEWS

발제는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복합지능연구실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상원 경희대 스마트관광원 교수,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 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

포럼은 우선 인공지능의 발달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 통번역 기술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위축된 관광 시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춘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관광 육성 정책 및 추진 사례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아울러 국회도서관에도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산정책처, '경제·산업동향&이슈(제16호)' 발간

국회에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경제·산업동향&이슈(제16호)'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매월 경제·산업분야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전망을 수록하는 월간 동향지다.

이번호에서는 통화 유동성 증가가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이 시중 유동성을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지속적인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간의 정(+)의 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총 인플레이션의 경우 부문별 인플레이션 효과가 합산되는 측면이 있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축소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화 유동성 증가가 지출목적별로 구분된 12개의 개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분석기간(1987년 1분기~2020년 4분기) 동안 유동성은 유의하게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동성은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2000년 1분기~2020년 4분기)로는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간의 유의한 관계가 크게 약화되면서 유동성이 일부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는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국채발행 확대와 시장이자율과의 관계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분석', '최근 글로벌 부채 누적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 등 다양한 경제·산업현안에 대한 분석이 수록됐다.

국회에산정책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발간

국회에산정책처는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13.8.제정)'에 근거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관련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2020년까지 국내복귀기업 수는 80여 개에 불과한 등 국내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 시행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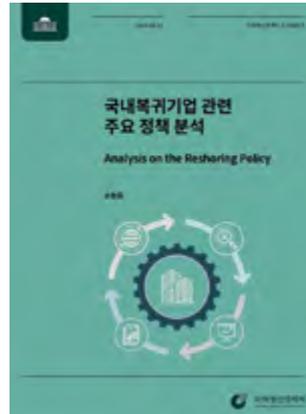
2014년부터 국내복귀기업 관계 법령 및 정책 등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의 집행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내복귀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국내복귀기업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나 동반복귀 측면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므로, 실질적인 국내복귀 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복귀사례, 국내복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복귀 지원정책과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정책 간에 밀접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산업기술·중소기업기술, 지자체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과 국내복귀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실무적인 측면에서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추가 정보 수집·전달기능 강화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외유사사례를 감안해 국내복귀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실질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해 국내복귀에 따른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래로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에서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의 지역



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지원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는 5월 4일 코로나19 방역단계 상향조정 및 장기화에 따라 잠정적으로 연기됐던 ‘2020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 방역지침을 준수해 이번 시상식은 부득이하게 대면과 비대면 시상식으로 동시 진행했다. 국회의장상에 해당하는 대상 수상자 1팀(2인)과 국회입법조사처장상에 해당하는 최우수상 수상자 1인은 대면으로, 나머지 우수제안상 9팀은 비대면으로 시상식에 참여했다.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 및 발굴을 취지로 개최된 ‘2020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138건의 제안(참가자 123명)이 접수됐다. 부서별 1차 심사와 제안심사위원회의 2차 종합심사를 거쳐 대상(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3단계 정책) 1건, 최우수상(국가면제법 제정안) 1건 및 우수제안상 9

NEWS

건을 선정했다.

이날 대면 시상식에 참여한 대상 수상자 배예린, 박상현은 “피해자가 그 피해 환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회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영준은 국가면제법이 제정되어 우리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사처는 이번 수상작들을 모아 ‘2020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 수상작품집’을 발간했으며, 국민이 보내준 다양한 제안을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도 게재했다.

앞으로도 조사처는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하고자,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와 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책 분야의 연구·학술 역량을 증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내 유일 특별자치도의회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17년 8월 29일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특강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교류해 왔으며, 이번에 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류·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여러 현안에 대한 도민의 뜻을 수렴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요 국가·사회 현안에 대해 중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 기관이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통한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국가미래전략 : 성찰과 새로운 방향)를 개최했다.

이날 3주년 기념 토론회는 제1부 개회식과 제2부 발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 개회식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정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2부 발제 및 토론 시간에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국가미래전략 : 성찰



과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성경룡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원장,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새로운 국가 미래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필수인원만 참석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방영됐다. 토론회 영상은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토론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5월 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조망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과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유빈 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과 연

구회 소속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성원 그룹장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통해 앞으로 30년 안에 인간관계, 사회적 환경, 자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동인은 인공지능 기술임을 예측했다. 박상훈 그룹장은 '인

공지능과 미래의 정

치'를 주제로 최초의 인공지능 국가론인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통해 '기술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기술을 선용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김유빈 실장이 '인공지능 관련 입법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회 의안 현황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에 대응할 입법 과제 전략을 제안했다.

미래경제연구회 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시를 통한 의정지원 활용방안 등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많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곤 원장은 "국회미래연구원은 중장기적 미래를 전망하고 필요한 전략을 도출한다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같은 중요한 의제들을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런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래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내실 있게 분석”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국회예산정책처

용·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아 기회가 있을 때 관련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예산정책처에서 해당 분야 채용공고가 나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담당했던 예결산분석은 제가 생각했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사업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과 각종 사안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책으로는 얻지 못하는 지식을 얻고 안목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Q 국회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국회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국회예산정책처에는 2006년 6월 초 입사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사회예산분석과 분석관으로 예결산 업무를 했고, 2009년 말에 법안비용추계과로 옮겨 사회복지 관련 비용추계와 재정전망을 담당하다가 3년 전부터 사회비용추계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전에 예산정책처에 대해서는 지인을 통해 들은 적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는 것 이외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 고

Q 예산정책처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주세요.

A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국회 재정전문기관으로, 재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해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 4개 실국의 주요 업무는 예산분석실의 경우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분석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추계세제분석실은 수입·지출 법률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와 국가의 수입·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에 대한 중장기 전망, 경제분석국은 국가재정 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기획관리관은 업무의 기획·조정, 조직 및 인력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법인비용추계의 경우 ‘국회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의원 발의 법안의 비용추계 실시 주체가 예산정책처로 일원화 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추계세제분석실은 이러한 법인비용추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 재정전망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출범했습니다. 기존 타 실국으로 분리·운영됐던 세입전망 및 세제분석 업무와 지출법인 비용추계 및 중장기 재정전망 업무를 추계세제분석실에서 통합·수행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미래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보다 내실 있는 분석 역량이 높아지면서, 추계세제분석실의 각종 법인비용추계 및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최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언론의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Q 사회비용추계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세요.

A 사회비용추계과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인비용추계와 지출 관련 중장기 재정전망입니다. 해당 분야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주요한 의무지출 항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추계·전망 항목은 대부분 모형에 기반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통계와 숫자에 익숙합니다. 사회복지 제도는 지원대상과 지원단가가 세분화되는 등 제도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설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간에도 상호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제도 내 특징과 제도 간 연관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모형을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추계 및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OECD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분류와 전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류체계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예산정책처 고유의 전망모형에 기초한 세부항목별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향후 지출 수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A 모든 업무가 기억에 남지만 특히 작년에 동료들과 함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해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4개 연금을 하나의 보고서에 담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애를 많이 썼고 고생은 제가 가장 덜한 거 같은데, 발표는 제가 하게 되면서 인생에서 제 모습이 가장 오랫동안 TV 방송화면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주 민망한 경험이었네요.

Q 앞으로의 국회 생활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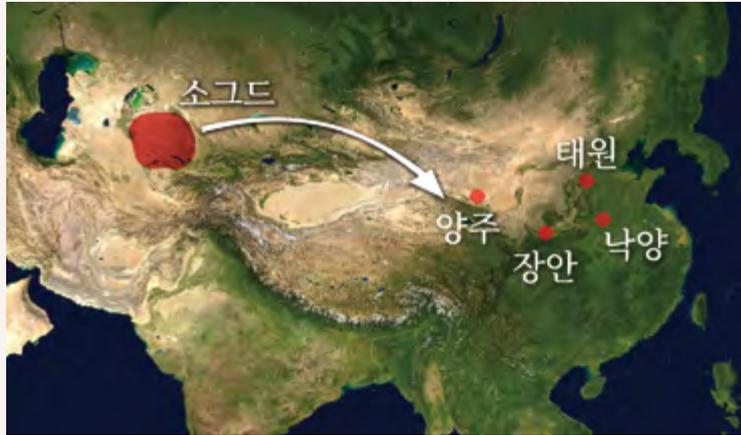
A 예산정책처에서 생활하다보니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큰 탈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고민하고 터득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많이 모자라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정진하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 김영선 사진 임진완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무역을 장악한 소그드인



오늘날 중앙아시아 5개 독립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들이 위치한 지역은 예부터 찬란한 농경 도시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다. 아무다리야(Amu Darya)와 시르다리야(Syr Darya)라고 하는 두 강줄기를 중심으로 발달한 사마르칸드(Samarqand)나 부하라(Bukhara) 같은 도시들의 주민들은 유라시아 초원,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 이웃 문명들과 빈번한 교류를 통해 상업과 무역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비록 많은 인구와 강력한 무력을 갖춘 외적의 침입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앙아시아의 도시 문명은 무역 네트워크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무역 중심지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6월호에서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1세기 유라시아 무역과 경제를 장악했던 소그드(Sogd)인들에 대해 알아본다.



소그드와 중국 소그드 군락 지도

기원전 330년경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출신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거쳐 북부 인도까지 정복했을 때 맞닥뜨린 중앙아시아의 도시 문명은 소그디아나(Sogdiana)였다.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 그리고 그사이 지대를 흐르는 자라프산(Zarafshan)강 유역에 발달한 소그디아나는 아프가니스탄 북부를 가리키는 박트리아(Bactria)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의 동북 변경을 구성하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시기 소그디아나의 중심 도시였던 마라칸다(Marakanda), 즉 오늘날의 사마르칸드(Samargand)는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 그리고 동서교역의 핵심 루트로서 번성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고 아무다리야 상류지역의 박트리아(Bactria)를 중심으로 그리스계 왕국이 수립됐다. 하지만 흉노를 피해 이주해온 스키타이-월지 연합군이 이 지역을 장악한다. 이어 월지가 남하해 아프가니

스탄-인도 북부의 쿠산 제국을 건설한 틈을 타, 강거(康居)라고 하는 국가가 사마르칸드 일대를 차지했다. 그 결과 사마르칸드는 중국에서 강국(康國)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강국을 비롯한 소그드 지방의 도시 국가들은 이후 몽골 초원에서 성장한 유연(柔然) 제국 및 돌궐(突厥)-튀르크 제국이 확장된 결과 이들 유목 제국의 영향권 안에 편입됐다.

무역로 곳곳에 주재원 두고 서신으로 정보 교환

그러나 정치적 변동과는 상관없이 비단 교역을 포함한 유라시아 장거리 무역은 지속됐고, 소그디아나 출신 소그드 상인들이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후한(後漢) 말기 혼란 속에서 중국을 재통일한 사마(司馬) 씨의 진(晉)나라 시기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에 이르는 '실크로드' 무역에 적극 참여했다. 중국 측 기록에 '속특(粟特)'으로 명명된 소그드 상인들



▲소그드 상인 출신 사군묘에서 출토된 석곽
▶소그드 상인을 묘사한 당나라 도자기(당삼채)



은 무역로 곳곳에 주재원을 두고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교환했다. 이러한 소그드 상인들의 서신 가운데는 흉노의 유연(劉淵)과 그의 아들 유충(劉聰)이 310년경 진나라의 업(鄴)과 낙양(洛陽)을 공격하여 불태웠던 이른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시작이 되는 사건도 묘사되어 있다.

북중국에 흉노, 선비, 갈, 저, 강족 등 이민족 세력들이 각지에 정권을 수립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 탁발선비족이 북위를 건국하면서 소그드 상인들의 무역 활동 역시 더욱 활발히 진행됐다. 이 시기 사마르칸드를 뜻하는 강국(康國) 출신 뿐 아니라 부하라(Bukhara)를 뜻하는 안국(安國), 타슈켄트(Tashkent)를 뜻하는 석국(石國),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샤희리사브즈(Shahrisabz) 지역을 뜻하는 사국(史國) 등 다양한 중앙아시아 도시 국

가 출신 상인들이 중앙아시아-중국 사이 무역을 위해 중국에 정착했다. 북위에 이어 중국을 통일한 수(隋)나라, 그리고 수나라를 이은 당(唐)나라 시기 기록에는 소그드 지역을 정치적으로 통할한 강국 군주의 성씨인 소무(昭武)를 따서 ‘소무구성(昭武九姓)’ 혹은 ‘구성호(九姓胡)’라고 불렀다. 이들의 지역 대표자를 ‘살보(薩保)’라고 불렀는데 이는 소그드어의 ‘사르트파우(Sartpaw)’ 즉 ‘대상무역의 우두머리(Caravan Leader)’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살보는 소그드 군락에 건설된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 사원에서 성스러운 불의 관리를 맡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다.

소그드인들은 중국 각지에 군락을 형성할 뿐 아니라 새롭게 중국을 통일한 수·당 정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부상했다. 중국에서 발굴된 소그드인들의 묘역에서는 비문 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과 벽화가 출토

되어 이들 중앙아시아 출신 상인들이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렸음을 보여준다. 2003년 중국 시안(西安)에서 출토된 묘는 중국 측 표기로 사군(史君), 소그드어로 위르카크(Wirkak)라는 인물의 것으로, 그 역시 소그드 상인 출신이었다. 그는 중국 서북부의 양주(涼州, 즉 지금의 우웨이武威)의 살보(薩保)로 복무하다가 580년 사망했다. 이러한 소그드 묘는 석곽(石槨)의 사용과 같은 독특한 묘실 구조와 함께 종교적 상징으로 가득한 부조(浮彫)나 벽화를 통해 당시 소그드 집단이 현지 중국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중앙아시아 문화를 이어나갔음을 보여준다.

당나라 뒤흔든 반란 주인공 안록산과 사사명 배출

중국에 정착한 소그드 출신 집단은 당나라를 뒤흔들었던 반란의 주인공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부하라, 즉 안국(安國) 출신 집단을 기반으로 했던 안록산과 샤흐리사브즈, 즉 사국(史國) 출신 집단을 기반으로 했던 사사명 모두 중국의 소그드 정착민 출신이었다. 안록산의 이름 록산은 페르시아어 ‘로샨(Rawshan)’을 음차한 것으로 ‘빛나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들은 중국 북방 변경 시장의 통역이었는데 군에 발탁되어 전공을 쌓았다. 그리고 742년 당 현종(玄宗)이 안록산을 평로절도사로 임명하면서 북방의 군권을 장악하게 된다. 결국 755년 현종의 의심을 산 안록산과 사사명은 반란을 일으키고 당의 수도 장안(長安)을 점령한다. 이들의 반란은 762년 당나라가 요청한 위구르(Uyghur) 제국의 군대에 진압될 때까지 계속됐다.

중국을 격변 속에 몰아넣었던 안록산-사사명의 반란이 진압되면서 중앙아시아 소그드 출신 집단들은 중국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하지만 소그드 상인의 영향력은 몽골 초원에서 계속됐다. 안록산-사사명의 난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앙아시아 위구르 제국을 소그드 상인들이 좌지우지한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762년 안록산-사사명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북중국으로 온 위구르 텡그리 비귀(Tengri Bögü) 카간이 소그드인들을 통해 그들의 종교였던 마니교(Manichaeism)로 개종했고, 이후 위구르 제국에서 소그드 상인들이 정치·경제적 특권을 누렸기 때문이다.

혹자는 돌궐 제국을 무찌르고 몽골 초원을 장악했던 위구르 제국이 급속도로 쇠퇴한 원인이 소그드 상인들을 통해 육식을 거부했던 마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그드 상인들이 위구르 제국에서 자리잡은 것은 종교적인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소그드 상인들의 무역 네트워크가 가진 힘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의 시기부터 당나라를 이어 위구르 제국에 이르기까지 소그드 상인들은 유라시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는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돌궐, 몽골과 같은 유목 제국뿐 아니라 소그드 상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무역과 상업활동의 관점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글 이광태(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강릉에서 '숲'과 '계곡'을 즐기고 싶다면
강릉솔향수목원





수목원 초입부터 시원한 풍경이 펼쳐진다.



잔디광장

‘강릉’ 하면 대부분 “바다!”를 떠올리겠지만 강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울창한 소나무숲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강릉 이곳저곳을 둘러보면 도로표지판, 시청, 택시 등 강릉시의 슬로건인 ‘솔향강릉’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그만큼 강릉 어디를 가나 쉽게 소나무 숲을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차량으로 강릉 시내에서 20분, 경포 바다에서 짝조름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30분을 달리다보면 솔냄새 풍기는 수목원이 펼쳐진다. 2013년 10월에 개원한 강릉솔향수목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나무를 테마로 조성한 수목원으로 금강소나무 원시림을 간직한 칠성산 자락, 강릉에서 경치 좋기로 이름난 용소골에 들어섰다. 강릉의 대표 수종인 금강소나무가 잘 가꿔져 있고, 천연 숲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자랑한다.

숲길도 걷고 물가에서 더위도 식히고

솔향수목원은 78.5ha(약 24만 평) 부지에 1천331종 24만 본의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비비추원, 수

국원, 암석원, 약용식물원, 원추리원, 염료식물원, 창포원, 철쭉원 등 23개의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계절별로 다양한 풍경을 관람할 수 있다. 가파른 등산코스와 평탄한 산책길도 잘 구성되어 있어 선택에 따라 트레킹을 즐길 수도 있다. 수목원 입구부터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숲길과 곳곳에 마주하는 계곡은 특히 더운 여름 발을 담그고 무더위를 식히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숲길은 크게 ‘하늘정원길’, ‘전시온실’, ‘전체관람길’의 세 갈래로 나뉜다.

수목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소리와 꽃향기, 솔향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초입에는 다양한 야생화를 주제로 한 비비추원, 원추리원, 암석원, 배롱나무쉼터, 향기원과 염료식물원 등의 전시원을 갖추고 있다. 염료식물원은 식물체에서 만들어지는 색소를 이용해 천연염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을 모아놓은 곳으로 강릉솔향수목원에서는 감국 외 21종의 염료자원이 되는 식물들과 여러 종류의 관목 등을 식재해, 관리하고 있다.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소리가 방문객들을 반긴다.

수목한계선(고산 및 극지에서 교목이 존재할 수 있는 극한의 선)에서 자생하는 고산식물과 저지대의 건조한 암석 등에서 서식하는 식물이 전시되어 있는 암석원에는 건조 척박지에서 생육 가능한 다육식물과 얇은 토심과 강한 햇빛, 건조에 견디는 힘이 매우 강한 비자나무 외 138종 등 다양한 교목, 관목, 초화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전시한 약용식물원에서는 피나물 외 42종, 여러 종류의 조경수목(교목, 관목)을 관찰할 수 있다.

매죽나무와 생강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숲생태관찰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이 접근하기 쉽게 완

만한 경사로로 조성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높은 데크길로 이루어져 나무 기둥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 옆으로 나뭇가지를 지나쳐 마치 하늘을 걷는 느낌이 들게 하고 매죽나무 가지들이 양옆으로 드리워지면서 터널이 형성되어 걷다보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금강소나무를 품고 있는 ‘솔숲잔디광장’에서는 비치된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 자연을 담은 바람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여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힐링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강릉 시내와 강릉 바다를 한눈에

‘천년숨결 치유의 길’은 금강소나무와 서양측백나무 등 주목들이 지그재그 데크길을 따라 피톤치드를 풍부하게 발산한다. 스트레스 해소 등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숲해설사는 “천년숨결 치유의 길’을 거쳐 ‘하늘정원’으로 향하는 숲길이 수목원의 가장 인기 코스”라고 설명했다.

‘천년숨결 치유의 길’을 지나면 솔향수목원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 ‘하늘정원’에서 강릉 시내를 바다 수평선과 함께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하늘정원에는 소나무, 철쭉류, 야생화 등 식물들이 바위틈에서 조화롭게 자라고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정상에서 걸어내려오다 또 다른 ‘전시온실길’ 코스로 가다보면 수목원의 마지막 코스인 ‘늘솔길식물원’이라는 이름의 전시온실이 나온다. ‘늘솔길식물원’에는 아열대·난대식물과 함께 올리브나무, 허브

식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온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시설은 폐쇄되어 관람할 수 없다.

강릉솔향수목원은 전시시설뿐 아니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숲 교육프로그램과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숲해설프로그램은 숲해설가와 함께 걸으며 수목원 구석구석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릉솔향수목원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

- 관람 및 개방시간(매주 월요일 휴원)
09:00~18:00(하절기 3월~10월)
09:00~17:00(동절기 11월~2월)
- 홈페이지(숲해설 예약)
www.gn.go.kr/solhyang
- 안내전화 033-660-2322
-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강릉 |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천년숨결 치유의 길



하늘정원에서, 강릉 시내와 강릉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19세기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콜레라’



보통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 발생하는 전염병인 콜레라(Cholera)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한 번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무서운 병이었다.

먼저 조선 시대, 국가 공식 기록인 ‘순조실록’ 1821년 8월 13일자 내용을 보면, 평양의 도시 안팎에 괴상한 병(괴질), 즉 콜레라가 유행한다는 보고서가 실려 있다. 그 괴질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설사와 구토가 멈추지 않고(토사) 오줌을 눌 수가 없는 증상(관격)을 앓았으며, 콜레라에 걸려 죽은 사람이 열흘 동안에 1천여 명이나 되었고,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했다. 이틀 후인 1821년 8월 15일자 ‘순조실록’에서는 순조 임금의 도성 즉 수도 한양에까지 콜레라가 퍼지고 있어 민심이 뒤숭숭하다고 언급했다.

‘순조실록’에 기록된 콜레라

또한 1821년 8월 22일 ‘순조실록’에서는 당시 조선에 나돌았던 콜레라에 대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먼저 심하게 설사를 하고 곧이어 오한(저체온증)을 앓으며, 전염 속도가 불뚱이 튀는 것보다 더 빠르다. 또한 치사율도 높아서 10명이 걸리면 1~2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고위 관리들 중에서도 10여 명이 죽었고, 평범한 관리와 백성들 중에서 이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은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이 병은 중국 요동 지역에서 들어와 온 나라에 퍼졌다”고 묘사했다.

이 콜레라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과연 조선

에는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까? 조선 말엽의 학자인 정약용(1762~1836년)이 1821년에 낸 책인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콜레라로 인해 평양에서 수만 명, 한양에서 13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조선이 아닌, 과학 기술이 더 발달한 서양에서는 콜레라를 잘 막아냈을까? 그렇지 않았다. 서양에서도 콜레라로 인한 피해자는 무척 많았으며, 전염 상황도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됐다.

사실 콜레라의 발원지는 인도였다. 하지만 19세기 초부터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콜레라는 당시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해군 함대를 통해 서양을 포함한 세계 각지로 삼시간에 퍼져 나갔다. 1800년대의 미국에서는 15만 명이 콜레라에 걸려 죽었으며, 1892년 독일에서는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8천600명이 콜레라로 사망했다. 서구 국가들 중에서 콜레라의 피해가 가장 컸던 러시아에서는 1847년에서 1851년 사이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19세기의 세계를 주도하던 서구 국가들에서 이렇게 콜레라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강과 하천의 오염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1800년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넓은 식민지를 가지고 최전성기를 누리며 대영제국이라 불리던 영국에서도 수도인 런던의 템스강에는 사람들

이 집에서 나온 배설물이나 쓰레기들을 그대로 갖다 버려 강의 수질이 무척 나빴다. 런던의 하수도에는 개와 고양이들의 시체와 썩은 생선, 버려진 옷과 말뚝이 넘쳐났고 그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쥐가 들끓었다.

콜레라의 창궐은 서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하수도의 정비와 오폐수 정화시설이 도시마다 대대적으로 갖추어진 일을 들 수 있다. 콜레라를 연구하던 서구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콜레라에 걸리는 주요 원인이 오염된 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도시 주민들에게 오염된 물을 공급하는 하수도망을 새로 정비해야 콜레라가 퍼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었다.

그리하여 1848년부터 1854년까지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대도시들에서는 상하수도망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급수와 오물처리 체계를 갖추었다. 미국도 거듭 콜레라의 감염 때문에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자, 1866년에 들어서 대도시인 뉴욕에 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상하수도를 설치해 콜레라 예방에 나섰다. 독일은 1892년 함부르크에서 콜레라에 오염된 엘베강의 물을 그대로 식수로 받아서 썼다가 수많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자, 비로소 상하수도망과 오폐수 정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해 콜레라 감염을 예방했다. 🍷

글 도현신 작가

시간과 공간과 일상을 포착하는 유근택의 눈과 손



유근택 '어떤정원'(Some Garden, 2005), 종이에 수묵채색, 173×138cm

유근택의 이 그림 '어떤정원'은 뭔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렇고 그런 '어떤' 정원을 그린 것이다. 꽃과 나무와 돌과 같은 정원의 요소들에 사람이나 자동차, 집, 곤충 따위 사물들이 뒤죽박죽 얽혀있는 모습이다. 그림을 보는 관객들이 보기에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과 장면을 연출해놓고 있는 이 그림 속에는 실은 매우 비상식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다. 사물의 비례와 원근과 인과 관계가 들어맞지 않는 이상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그림이 어색하지 않게 눈에 들어온다는 점이다. 자세히 관찰하기 이전에 이 그림은 질서와 균형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혼돈과 부조화가 드러난다.

전형적인 틀 깨고 새로운 동양화 그린 유근택

유근택은 동양화가다.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나왔고, '동풍(東風)'이라는 그룹 활동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며 화단에 등극했으며, 대학에서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이래저래 동양화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왔다. 동양화라는 것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화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싫었던 조선총독부가 붙여준 이름이었다. 동양이라는 거대한 지역 범위를 근거로 삼은 동양화라는 미술 영역은 존재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내내 물질적 실체로서 존재했다. 주로 채색화였다. 채색화를 주로 하는 일본화의 영향이 컸다.

식민지의 종말과 함께 동양화는 변신했다. 채색화 위주의 동양화는 일제 잔재로서 청산의 대상이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은 동양화는 먹그림이었다. 먹의 농담을 한껏 멋스럽게 구사한 한 폭의 산수화. 그것은 동양화의 가장 전형적인 미술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랬던 동양화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친 시기가 있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의 일이었다. 한지 위에 먹과 채색 안료를 사용해 모필로 그림을 그리는 동양화가들이 새로운 언어를 창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군의 동양화가들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동양화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화가 중의 한 사람이 유근택이다.

유근택은 서른 무렵의 청년시절부터 새로운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그린 새로운 동양화는 무색무취의 산수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냄새가 짙게 배어나는 일상의 서사를 담고 있었다. 그는 사건이나 사물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관찰자로서 화가의 정체성을 향해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차안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을 때의 느낌을 이차원의 평면 위에 구현하려고 했다. 움직이는 사물을 평면 위에 펼치려는 그의 생각은 특유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명료하게 딱 떨어지는 형상이 아니라 흐릿하게 사라져가는 형상을 통해 유근택은 훨씬 더 폭넓게 사물과 사건과 상황을 포착하는 화가로 거듭났다.

수묵채색화 계열의 화가들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형상에 안주해있었던 데 비해, 유근택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 새로운 동양화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동양화라는 낡은 틀로 그를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그림은 전통 기반의 회화로서의 동양화,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의 한국화라는 틀에 가뒀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했으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것이었다. 그는 능수능란하게 수묵채색화 재료를 다루면서 전통회화의 맛과 멋을 잘 살려냈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창출하는 빼어난 재주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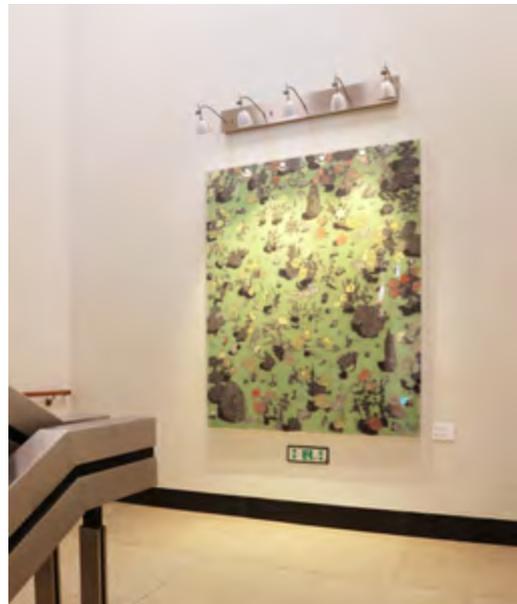
평범한 것들의 일상성에 주목하다

586세대인 그는 1980년대의 거대담론 영향 아래서 청년기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일상이라는 90년대의 미시담론을 자신의 작품 세계와 연결했다. 사실 정원이나 거리, 가옥, 아파트, 실내 공간 등의 익숙한 일상 속 시공간은 굳이 그림의 주제나 소재로 등장할 일이 없는 것들이었다. 유근택은 이 평범한 것들의 일상성에 주목했다. 때때로 정치적인 주제까지도 담아내는 그림 속에서도 그는 정치의 낯선 대립보다는 정치의 장에 존재하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정치적인 것을 탈정치적인 것으로 치환함으로써 그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일상 속에 담긴 구조적 반복을 보여준다.

그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건을 발견하고 그것에 주목하는 자신의 관찰력 자체를 작품의

주제로 삼기 시작했다. 아무런 사건을 담지 않은 그림에서도 그 속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만 같은 유근택 회화의 표현력은 그의 관찰력에서 나온다. 사물과 상황과 사건을 관찰하는 화가의 눈으로부터 그것을 느낀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재구성하는 화가의 손에 이르기까지 유근택의 눈과 손은 일상성의 회화를 향해 더욱 깊게 들어갔다. 유근택의 그림은 하늘 위의 동양화를 땅 위의 수묵채색화로 뒤바꾸는 데 일조했으며, 그의 그림들로 인해 이 땅의 수묵채색화는 더욱 더 탄탄하게 현대미술 속에 자리 잡았다. 🏠

글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유윤기



국회 본관 후면 중앙 계단 2층에 걸려 있는 유근택의 '어떤정원'



‘자란’

국회의원동산 아래 ‘화합의 꽃밭’ 한편에 피어 있는 난초 ‘자란’입니다. 이슬을 머금은 홍자색의 난꽃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동양란인 자란은 백급, 주란, 대암풀이라고도 불리며 제주도, 해남, 진도 등 따뜻한 해안지방에서 자생합니다. 한 방에서 약초로도 이용되는 자란의 꽃말은 ‘서로 잊지 않다’라고 합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유윤기



홍릉의 능침

쓰러진 근대의 꿈, 망국의 한... 남양주 홍릉과 유릉

경기 남양주에 가면 사적 제207호 홍릉(洪陵)과 유릉(裕陵)이 있다. 홍릉은 고종 부부의 합장릉이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녕전(咸寧殿)에서 승하했다. 고종의 능역(陵域)은 경기 남양주의 금곡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서울 청량리에 잠들어 있던 명성황후(明成皇后) 홍릉의 천장(遷葬)도 추진됐다. 명성황후가 1919년 2월 16일 먼저 남양주로 옮겨왔고 이어 3월 3일 고종도 함께 묻혔다.

고종은 살아 있을 때, 청량리의 명성황후 홍릉을 남양주로 옮기기로 했었다. 조성 공사까지 시작했지만 위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홍릉 천장은 실현되지 않았다. 결국 고종 사후에 명성황후의 천장과 함께 고종 부부 합장이

이뤄진 것이다.

유릉은 순종과 황후 2명이 함께 묻혀 있는 3인 합장릉이다. 이런 경우는 조선 왕릉 가운데 유릉이 유일하다. 순종은 1926년 4월 25일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했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이 열렸고 다음날인 6월 11일 남양주 금곡의 유릉에 묻혔다. 아버지인 고종의 홍릉 바로 옆이다. 순종의 장례 며칠 전인 6월 5일 순종의 정후(正后)인 순명황후(純明皇后) 민씨가 이곳으로 옮겨왔다. 순명황후 민씨는 1904년 세상을 떠나 지금의 서울 어린이대공원 자리에 묻혀 있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뒤인 1966년 순종의 계후(繼后)인 순정황후(純貞皇后) 윤씨가 72세로 세상을 떠났고, 이곳에 함께 묻혔다.

기존 왕릉들과 다르게 꾸민 홍릉과 유릉

조선시대 왕릉 40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홍릉과 유릉도 여기 포함된다. 그런데 홍릉과 유릉은 그 공간 구조와 분위기가 다른 왕릉과는 많이 다르다. 조선 왕릉은 입구에 홍살문이 있고 그 뒤로 난 참도(參道)를 따라가면 정자각(丁字閣)이 나온다. 정자각은 신위(神位)를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곳이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지붕이 정(丁)자 모양이라고 해서 정자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자각 뒤쪽 높은 곳에는 왕의 시신이 묻힌 능침(陵寢)이 있다. 동그런 능침 주변에는 석물(石物)들이 서 있다.

하지만 홍릉과 유릉의 경우 정자각(丁字閣) 대신 일자 모양의 침전이 있다는 점, 참도(參道) 주변에 석물이 두 줄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왕릉과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참도 주변에 설치한 석물이다. 보통의 조선 왕릉에서는 참도에 박석(薄石)만 깔려 있다. 그러나 홍릉과 유릉은 이곳에 석물을 배치했다. 병풍석, 난간석, 혼유석(魂遊石),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은 조선 왕릉의 형식을 따라 능침 주변에 배치했지만 문

석인(文石人, 문인상), 무석인(武石人, 무인상)과 석수(石獸)는 능침 주변이 아니라 참도 주변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중국 명나라의 태조의 효릉(孝陵)의 방식이다.

홍릉 유릉의 참도엔 문석인, 무석인,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의 석물들이 두 줄로 도열하듯 배치해 놓았다. 문석인, 무석인은 높이가 3.8m에 달한다. 조선 시대 왕릉의 문석인, 무석인 가운데 가장 크다. 모두 기존의 왕릉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이다.

그럼, 홍릉과 유릉은 왜 이렇게 공간을 꾸민 것일까. 홍릉과 유릉의 주인공인 고종과 순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이다. 고종은 1897년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다. 끝내 국권을 상실하고 말았지만, 고종과 순종은 왕이 아니라 황제였다. 그러니 무덤도 황제의 무덤이어야 했다. 고종은 재위 시절인 1900년경부터 자신의 무덤은 중국의 황릉처럼 꾸며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홍릉과 유릉은 기본적으로 황제의 무덤 양식을 취하게 되었다. 조선 왕릉의 전통을 따르되 중국 황릉의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중국의 황릉처럼 여러 석물을 도열하듯 두 줄로 배치함으로써 그 위용을 보여 주려 했다.

하지만 홍릉과 유릉 사이에 차이점도 있다. 우선, 동물 조각인 석수를 보자. 홍릉 석물의 다리 사이가 막혀 있지만 유릉의 석물은 다리 사이가 뚫려 있다. 그리고 유릉의 석물이 홍릉에 비해 더욱 사실적이다. 유릉의 석물을 제작하는데 근대적인 조각기법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유릉의 조성과 석물 제작은 철저하게 일제가 주도했다. 일제는 유릉을 조성하고 한 해 뒤인 1927년에 침전 앞 석물을 만들기 시작해 1928년 마무리했다. 당시 일본의 대표 조각가가 제작한 모형을 토대로 유릉의 석물을 만들었다. 그 모형은 서양식 조각 수법으로 만든 것이다. 서양의 조각기법을 받아들였기에 우리의 전통 조각보다



유릉 입구와 참도 석물

사실적이고 입체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문석인, 무석인의 얼굴을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입체적이다. 한국인 얼굴이라기보다 다소 서양인 얼굴 같기도 하다. 이는 결국 우리의 전통적인 능묘 석물 제작방식을 무시한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예술품은 쇠멸했고, 신생기가 도래하여 그 시대의 예술작품을 남겨 후세에 전해야 한다”며 모욕적인 주장을 늘어놓았다. 조선의 전통 문화와 미술을 폄하하고 능멸하려는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였다. 누군가는 “문석인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무석인의 얼굴은 겁에 질린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유릉의 석물에는 이렇게 일제의 침략 의도가 짙게 담겼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제국을 창건했던 고종. 그는 중국에 버금가는 황제국의 위상을 무덤 양식에서도 구현하고자 했다. 그건 대한제국의 자존감의 표현이었고 근대 독립 국가를 향한 열망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꿈은 좌절됐다. 게다가 순종

유릉에 이르면 일제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개입은 대한제국에 대한 능멸이고 농락이었다. 고종의 의도와 달리 식민지 상황에서 빚어진 안타까운 결과였다.

색다른 분위기의 홍릉과 유릉. 두 줄로 우뚝 서서 찾는 이를 맞이하는 커다란 석물들. 그 독특함과 웅장함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거기엔 일제 침략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다. 저 석물들이 당당하기보다는 쓸쓸하게 다가오는 까닭이다.

홍릉과 유릉을 지나 좀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가면 대한제국 황족들의 무덤이 나온다. 대한제국 황태자 영친왕(英親王) 부부가 잠들어 있는 영원(英園), 영친왕의 둘째 아들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이었던 이구(李玖)가 묻혀 있는 회인원(懷仁園), 그리고 의친왕(義親王)과 덕혜옹주(德惠翁主)의 묘... 홍릉과 유릉에 가면 망국의 한이 우리의 발길을 무겁게 한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NATV가 만드는 '찾아가는 입법서비스'

달려라 입법카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입법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찾아가는 법률해결사

황현희, 마경민이 땀다!



마경민(변호사)

황현희(개그맨)

화요일 밤
10시 30분 방송



심우정

항일의 길, 사랑의 시

한용운 문학기행

광복의 의지로 걸어온 항일의 길, 스님이자 시인의 눈으로 바라본 억압받는 민족과 중생의 삶, 그 고통을 사랑으로 감싸 안은 만해 한용운. 그는 그렇게 수백 편의 시와 시조, 한시, 소설 등을 남겼다. 서울 탑골공원, 유심사 터, 그의 임종을 지킨 성북동 골짜기 심우정, 그가 물힌 망우리공원, 어느 날 하루, 만해 한용운을 생각했던 날이 있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로 시작하는 ‘님의 침묵’의 시인 만해 한용운. 그의 임종을 지키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골짜기 심우장으로 가는 길, 그의 시비와 동상이 있는 작은 공원 의자에 앉았다. 시비와 안내 글에 적힌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수행하는 것 같았다. 옛 생각이 났다. 교과서에 실린 ‘님의 침묵’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읽고 또 읽었다. 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외워졌다. 돌이켜 보면 그게 시의 힘이었고, 당시 그 시를 써내려갔던 한용운의 마음이 와 닿은 것이었다.

30℃를 넘는 땀별 아래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한용운의 시집을 펼쳐든다. 시를 읽는 마음이 서늘해진다. 한용운의 시를 관통하는 몇 가지 맥 중 하나는 사랑이다. 인간의 길, 구도의 길, 항일의 길에서 시인이 노래한 사랑, 그가 노래했던 사랑의 대상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할까? 그의 시 몇 편을 읽어본다. 그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

학생 몇몇이 땀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원 한쪽 의자에 모여 한용운과 그의 시에 대해 토론을 한다.

그들의 마음에 한용운은, 그의 시 ‘님의 침묵’은 어떻게 새겨질까? 수십 년 뒤 그들의 마음속 어디쯤에서 ‘님의 침묵’은 다시 깨어날까?

한용운의 임종을 지키던 심우장

심우장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라 계단을 올라간다. 1970년대 달동네 분위기가 나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심우장이 보인다. 한용운은 이곳에서 1933년부터 1944년 세상을 뜰 때까지 살았다. 그의 일상은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좌선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에 몰두했다.

당시에는 이곳을 북장골이라고 했다. 심우장 안내 글에 따르면 원래는 적음 스님이 초당을 지으려고 북장골 소나무 숲에 터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터를 만해를 위해 내어놓았고, 나중에 지인들이 도와 터를 더 늘려 지금의 심우장 터를 마련하게 됐다. 심우장을 지을 당시 조선총독부 건물을 마주 보기 싫다고 해서 북향으로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심우장 대문으로 들어선다. 왼쪽에 있는 100년 가



심우장 초입 작은 공원에 있는 한용운 시비



심우장 가는 길



100년 가까이 된 소나무와 심우장이 잘 어울린다.



심우장 건물 안에 있는 작은 전시실. 한용운의 생애와 그와 연관된 기록을 볼 수 있다.

가이 된 소나무는 예전에 이곳이 소나무 숲이었다는 걸 상징한다. 오른쪽 담장 구석에는 한용운이 직접 심은 향나무가 일제에 항거하고 광복을 염원했던 그의 기상처럼 푹푹하게 자라고 있다. 한용운은 이곳에서 ‘흑풍’, ‘후회’, ‘박명’ 등을 집필했다.

심우장 건물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방이 한용운이 주로 쓰던 서재다. 그곳에 향로암 야경을 읊은 한용운의 친필 한시와 선방 뒤뜰에 올랐던 감흥을 쓴 친필 한시가 있다. 보면 볼수록 인상이 깊게 남는 서체다. 방 처마 아래 걸린 심우장 편액은 오세창의 글씨다. 심우장의 이름은 선의 수행 단계를 열 폭의 그림으로 그린 심우도에서 따왔다고 한다. 가운데 방은 한용운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작은 전시실이다. 1917년 설악산 오세암에서 참선 중 깨달음을 얻고 남긴 ‘오도송’을 그의 필체로 새긴 것도 볼 수 있다.

남아란 어디메나 고향인 것들/그 몇 사람 나그네 근심
 잣단 말을 일러는가/한마디 큰소리 질러 삼천 대천 세계

뒤흔드니/눈 속에 복사꽃 붉게붉게 피네 -오도송-

한용운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의 임종을 지킨 심우장은 1984년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됐다(지금은 사적 550호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훼손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다. 기와가 내려앉고 기둥은 썩었다. 대문에 못이 박혀 있을 때도 있었다.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갔던 흔적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한다. 1991년 6월 보수공사를 마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북정마을에서 망우리공원까지

심우장을 품고 있는 산을 옛날에는 연나산이라고 했다.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부르던 이름이다. 심우장에서 나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성북03 마을버스 회차 지점인 ‘노인정 정류장’이 나온다.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께 옛 이야기를 들었다. 3대를 이어 이곳에 살고 있다는 할아버지는 돼지(혹은 양)를 닮은 바위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는 그



북정마을

바위 아래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주변의 지형은 다 바뀌었는데, 그 바위의 일부만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심우장이 소나무 숲에 자리 잡았다는 옛 이야기에 비추어보면, 아마 당시 한용운도 솔숲길을 따라 연나산을 거닐지 않았을까?

북정마을에서 다시 심우장이 있는 골목으로 내려왔다. 골목길에 붙은 글귀의 의미가 더 깊게 느껴진다. 경성지방법원 취조록에 있는 '나는 내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다한 것이니 벌을 받을 리 없을 줄 안다'는 글귀가 연하다. 그의 글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에 나오는 '나라의 수천년 역사가 외국의 침략에 의해 끊기고, 몇 백 몇 천만의 민족이 외국인의 학대 하에 노예가 되고 소와 말이 되면서 이를 행복으로 여길 자가 있겠는가'라고 외치는 한용운의 외침을 듣는다.

골목에서 나와 향한 곳은 탑골공원이었다. 일제에 항

거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살았던 한용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만해용운당대선사비가 그곳에 있다. 계동 골목에 있는 '유심당'이라는 이름의 한옥집은 한용운이 잡지 '유심'을 발행했던 유심사가 있던 곳이다. 한용운은 1918년 '유심'을 발행하고 이곳에서 1919년 3·1운동을 준비하면서 불교계의 참여를 이끌었다.

한용운의 흔적을 따라가던 발길이 멈춘 곳은 중랑구 망우동 망우리공원이었다. 한용운이 묻힌 곳이다. 그렇게 염원하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광복 한 해 전인 1944년 세상을 떠난 그의 무덤 앞에서 그가 남긴 글 한 구절을 되새겨본다.

'만일 내가 단두대에 나감으로 해서 나라가 독립된다면 추호도 주저하지 않겠다.'

그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명사 샌드위치’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공무원 사회에서 널리 쓰는 말 중에 ‘개조식(個條式)’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일본식 한자어인 ‘개조서(個條書)’에서 온 말로, 표준어는 아니다. 따라서 굳이 널리 쓸 이유가 전혀 없다.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는 “글을 쓸 때 글 앞에 번호를 붙여가며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이라고 풀이돼 있다. 이 말의 순화어는 ‘조목조목인데 모든 문맥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아쉬운 대로 ‘개략식’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개략식’으로 작성된 문서는 내용을 간추리는 과정에서 조사와 어미를 생략하여 명사만 나열하거나 ‘음’이나 ‘것’과 같은 명사형으로 문장을 끝맺는 경향이 있다. 흔히 명사만 나열한 표현을 ‘명사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의 문제점은 어떤 명사가 수식어이고 어떤 명사가 피수식어인지 알 수 없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따라서 명사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조사와 어미를 되살려 써야 한다.

- (1) 지역사회 민간 인적자원망 연계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보호 실행전략 가동 (제주도청, 2021년 도정 주요업무계획, 2021. 2. 22.)
- (2) 국방부 사전정보공표 목록 등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국방부, 제10기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모집 공고, 2021. 3. 29.)

위의 예문에는 조사와 어미가 모두 생략돼 있다. 그 결과 예문 (1)의 ‘연계’는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알쏭달쏭하고, ‘가동’도 과거형으로 쓰였는

지 현재형으로 쓰였는지, 또는 미래형으로 쓰였는지 알 길이 없다. 예문 (2)의 ‘모니터링’은 주체가 국민참여단인 듯한데 모니터링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설문조사’의 주체는 국민참여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문장을 서술형으로 끝맺지 않고 ‘음’이나 ‘것’과 같은 명사형으로 끝맺는 것은 다분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구시대적인 문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 (3) 지원할 수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확보·배치할 것. (귀농귀촌종합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 안내)
- (4) 이탈여부 판단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 중임.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앱 잦은 오류 격리자-행정 모두 혼란 설 명자료, 2021. 5. 3.)

위의 예문에도 조사와 어미가 생략돼 있지만 예문 (1)~(2)에 비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서술어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예문 (3)의 ‘할 것’이라는 표현과 예문 (4)의 ‘노력 중임’이라는 표현은 해당 문서의 독자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임을 고려할 때 그다지 공손하거나 친절해 보이지 않는다. 본래 ‘개략식’ 문체는 조직 내에서 부하가 상사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체라는 점에서 내부 문서가 아니라 외부 문서에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국회, 본회의 열고 법률안 98건 의결,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실시

5월 4일

- 국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안경덕 고용노동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5월 6일

- 국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5월 10일

-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 출마 선언
-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혀

5월 11일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

5월 12일

- 김상희 국회부의장, 7박 9일간 스페인·포르투갈 공식 방문

5월 13일

-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본회의 통과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5월 17일

-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 예방

5월 18일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5월 19일

-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9~22일 미국 공식 방문
-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당 대표 출마 선언

5월 21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사노동법’ 등 법률안 98건 의결

5월 22일

- 박병석 국회의장, 7박 9일간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5월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열려

5월 24일

-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
- 더불어민주당, 백신 접종시 ‘4인모임·영업시간 제한서 제외’ 정부 건의

5월 25일

- 국회,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 실시
- 국민의힘,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이끌어 내 백신 조기공급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허브 특위 구성도 여당에 제안

5월 26일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정부, 6월 1일 부터 코로나19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해 방미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 요청

5월 28일

-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홍문표·조경태 의원 본선 진출

정리 윤성혜



Fish-POP, 사랑 충만한 물고기의 노래

2021. 6. 2. - 6. 29.

국회 ART GALLERY 6월 작품전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품 〈사랑 품은 달항아리〉 등 회화 16점
- 작가 황정희
- 추천 이영 의원실
- 문의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02-6788-2063

<편집후기>

새로운 출발선에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6월호를 발간하며 2021년의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6개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뛰겠습니다.

- 김현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통과로 가사근로자들이 68년 만에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돌봄 노동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영선

국회는 종이포스터를 대체하는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시범운영 후에 전체 게시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따릉이'도 설치됐습니다. 지구를 지키려는 국회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박민선

'칭찬합시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의원님들은 "칭찬을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합니다. TV에는 정쟁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하지만, 국회는 정치 이념이 달라도 칭찬이 쏟아지는 훈훈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 윤성혜

TV로도 즐기고
 폰으로도 즐기고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국회방송 NATV



**국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채널**

IPTV
olleh tv
 65

IPTV
SK Broadband B tv
 65

IPTV
U tv
 172

skylife
 165

케이블 방송
 지역에 따라 채널 번호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방송국에 문의

텔레비전이 없어도! 본방사수를 못해도!!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국회방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생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국회방송 앱



● 소셜미디어 채널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